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1

#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김혜영 · 김은지 · 최인희 · 김영란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

연구책임자 : 김 혜 영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은 지 (본원 연구위원)

최 인 희 (본원 연구위원)

김 영 란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급속한 사회변동으로 가족의 형태적 다양성과 개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빠른 기술변동이 노동환경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가족의 경제적 기반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가족의 구조적 불안정성이나 자녀양육에 대한 개별 가족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과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조손가족은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일시적인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형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혼이나 별거, 행방 불명 등의 이유로 자녀가 양육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조부모들은 그들 자녀를 대신하여 일정 기간이상 손자녀의 양육과 실질적인 부양의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가족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들 가족은 그 어느 가족형태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가구형태별 재분석이 가능한 거시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양육자로서 조부모와 양부모 혹은 한부모의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처한 다양한 학교안팎의 상황, 즉 학교급 진학사항, 친구와의 교우관계 및 유해환경노출과 방임의 정도 등을 가족형태별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당면한 경제적 부양 및 양육부담, 노인기 양육자로서 이들의 열악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손가족의 청소년들은 동일연령대의 양부모나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비해 열악한 학습환경 및 생활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조손가족 지원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이들 가족에게 적실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모쪼록 조손가족의 안녕과 삶

의 질 제고에 본 연구결과가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자문과 평가를 기꺼이 맡아주신  
외부의 자문위원과 원내 연구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1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가족의식 및 형태의 변화로 가족다양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손가족 역시 증가해왔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한 동거자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족은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함. 하지만,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5,224가구, 2005년 58,101가구로 지난 10년 동안 65.1%나 증가해왔음.
- 이같은 조손가족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실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생산은 물론 이들 가족에 대한 적실한 지원 방안에 관한 논의 역시 미흡한 수준임.
  - 2000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함. 그러나 대다수 기존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조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조사대상 조손가족의 사례는 2-300가구에 불과함.
  - 여성가족부 역시 2007년도에 전국 600여 가구를 조사한 바 있으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대다수의 조손가족은 국가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라는 점에서 자료의 한계가 있음(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여성가족부(2007, 2010)의 조사결과를 위시하여, 그동안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 조손가족은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 혹은 조모나 조부가 손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형태로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양, 조부모의 질병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여성가족부, 2007, 2010).

-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조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 양육자가 조부모라는 점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양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거는 미비함.
- 특히 조손가족의 어려움과 이들 가구 손자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조사된 바 있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정서·심리적인 특성이나 손자녀의 학교생활 등이 다른 가족·가구의 동일연령대 자녀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혹은 이들 가구의 조부모들은 다른 가구 형태의 양육자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비교가 용이하지 않음.
- 이같은 자료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조손가족 지원의 우선적인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의 미흡과도 연계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통계자료 가운데 가구유형별 재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구와 양부모, 한부모가구의 특성 및 이들 가구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생활세계를 비교분석함.
- 특히, 가구유형별로 조부모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심리정서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조손가족지원의 중요성과 적실한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를 논의함.
- 또한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함.

## 2. 주요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조손가족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조손가족의 생활실태를 재분석함.
-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 등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분석

☐ 지원대상 조손가구의 추계와 조손가족지원방안

- 조손가족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지원대상 조손가구 추계
- 조손가족지원과 연관된 유관정책의 검토 및 효과적인 조손가족지원방안 제시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조손가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조손가족지원과 연관된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을 검토

☐ 전문가 자문

- 노인 및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
-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 거시통계 재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재분석을 통해 조손가족 규모 추정 및 조손가족 생활실태 파악
- 사회조사 및 위기청소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조손가족의 조부모 및 손자녀 특성 분석

☐ 조손가족의 조부모 인터뷰

- 전남 순천시 ‘희망꿈돌이’ 사업 대상 조손가구 심층 인터뷰 진행
- 희망꿈돌이사업 학습도우미 면담

## 3) 연구의 의의

☐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 정책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실태자료생산
- 효율적인 조손가족지원 방안 제시



#### 4) 연구의 한계

- 기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 역시 제한적임.
- 기존의 유사통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손가족의 조부모나 손자녀의 양육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각기 활용한 자료들의 모집단이나 조사 방법의 차이로 분석결과와 해석 역시 제한적일 수 있음.
- 특히 조손가구의 사례가 충분하지 않아 조부모의 연령이나 지위, 혹은 조부모 가구의 특성이나 손자녀의 연령적 특성에 따른 조손 가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함.

## II. 이론적 논의

### I. 선행연구 검토

-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손가족연구는 통상적인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등을 포괄함.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생계와 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조손가족’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으나, 이때까지도 조손가족은 사회해체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현한 비정상적인 가족 유형으로 다루어 옴.
- 199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세대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 발표하기 시작.
- 2000년 이후 한국사회 역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님.
-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주목.
- 2010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고령으로 인한 노인의 만성 질환 등으로 신체·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이들 손자녀들은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학습지원 등의 대책마련이 중요하게 부각됨.

## 2. 조손가족의 개념과 범주

### 1) 조손가족의 정의

-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함.
  - 한편,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률 및 지침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조손가족의 범위는 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됨.
  - 조손가족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요건, 조부모요건, 손자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손가족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적실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 그러나 이같은 거시통계자료는 학계나 법률적인 정의에 맞춘 가족·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형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조손가족 : 65세 이상 조모 또는 조모와 18세 미만 손자녀가 동거하며, 부모와 18세 이상 손자녀가 없는 가족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1인과 18세 미만 자녀가 동거하며, 18세 이상 자녀가 없는 가족
    - 양부모가족: 부모 양쪽과 18세 미만 자녀가 동거하며, 18세 이상 자녀가 없는 가족

〈표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형태 정의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65세 이상 조부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상	- (무관)	- (무관)
부모	없음	부 또는 모 중 1인	부모 2인
18세 이상 (손)자녀	없음	없음	없음
18세 미만 (손)자녀	있음	있음	있음

### III.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 전국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의 생활실태를 양부모와 한부모 가족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족유형별 양육 아동수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아동수가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적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규모면에서의 차이가 있음.
  - 아동의 연령을 가구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3세 아동이 가장 많은 역V자형의 가파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양부모가족의 경우 평탄한 모양의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7.9%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손가족의 조부모 연령은 60대가 53.7%, 70대가 38.6%였으며 80대 이상인 경우도 4.6%로 나타남.
  - 부모 및 조부모 등 가구주 부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자 인구주택 총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조손가족 조부모의 약 3명 가운데 한명은 장애가 있고 약 5명 중 한명은 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 조부모들 스스로가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달함.

- 이러한 사실은 곧 조손가구 조부모의 건강문제가 시급함은 물론 이들의 치료기간 동안 손자녀 돌봄과 가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조부모들의 73.5%가 미취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한 조부모들의 대다수인 68.8%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공, 사무·서비스·판매직 등 일정 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의 종사비율은 매우 낮아 농림어업 외에 단순노무비율이 12.4%에 달함.
- 실제로 조손가족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으며, 소득구조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조손가족은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비중있는 소득 원천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1차 소득의 비중은 매우 낮음.
- 조손가족 지원사업이 확대될 경우 예산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빈곤 잠재 수급자 수를 추정하였음. 소득수준별 분포를 추정해보면 최저생계비 100% 미만은 전체 조손가족의 64.9%, 100-130% 미만은 전체 조손가족의 18.6%, 130% 이상에 해당되는 조손가족은 16.5%인 것으로 추정.
- 조손가족의 경우, 미취학 손자녀 돌봄은 주로 조부모에 의해 전담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주로 부모가 돌보지만, 때로 조부모가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는 한부모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보육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특히, 조손가족 초등학생 손자녀의 방과후 보육 역시 조부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다른 가족의 아동들이 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들을 통해 조부모 가족의 경우 이미 여러 차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물론 학습지도, 대화 및 의사소통 등 정서적 관계형성, 식사 및 청소, 빨래 등 가사 관련 문제, 적절한 양육자 역할 수행의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학교진학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만연령별 상위학교 비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상위학교로의 비진입 아동은 학업중단아동과 진입지체아동이 모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곧 학교탈락률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된 연령에 상위학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아동에 비해 기회평등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조손가족 아동의 경우, 한부모나 양부모가족 아동에 비해 상위학교 비진입률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짐. 이는 학습지도 등 교육지원에 있어 조부모의 지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발표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의 우울, 불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위기요소에 해당하는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와 부모 및 조부모의 방임정도 역시 조손가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친구관계는 건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가구유형별로는 격차가 나타나, 예컨대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반사회적 친구가 있다는 응답과 더불어 인터넷 노출정도 등 유해환경 접촉 빈도가 여타 가구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또한 신체적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 강탈의 경험과 함께 가출경험,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경험평균 역시 예에서도 조손가구 청소년들에게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IV. 조손가족지원정책의 특징 및 정책제언

-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으며, 소득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음.
  - 더욱이 이들 가족의 조부모들은 열악한 건강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들 역시 건강하지 않은 학습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부재함
  - 조손가족은 소득 및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받거나, 조손가족의 구성원인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조손가족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며, 조손가족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에 불과함.
  - 또한, ‘가족’단위의 지원보다는 노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원이 많아 조부모-손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손가구를 위한 연금 수급권 특례조항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 및 지원액의 현실화 등 조손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둘째, 조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손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 지원 서비스(예: 일상생활 지원사업, 급식서비스 등)의 확대와 양육관련 기술 교육 실시 및 영유아돌보미사업, 학습활동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셋째, 조손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넷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조손세대통합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성화

화 등 정서적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조손가족의 역량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조손가족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요구됨(예: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정의, 정책 지원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등).
- 여섯째, 조손가족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절차를 제공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조손가족지원의 근거와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양육비지원액 현실 (한부모가족 추가 생계비 지급 및 조손가족 추가수당 지급), 조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조손가족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존 제도들과의 중복 및 충돌지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법 마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5
II. 이론적 논의 .....	9
1. 선행연구 검토 .....	11
2. 조손가족의 개념과 범주 .....	13
III.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	17
1. 조손가족의 규모 및 가구특성 .....	19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실태 .....	25
3. 손자녀돌봄 및 손자녀의 학교생활 .....	45
4. 소결 .....	67
IV. 조손가족지원정책의 특징 및 제언 .....	71
1. 조손가족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및 현황 .....	73
2. 조손가족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87
3. 소결 .....	98
■ 참고문헌 .....	103
■ 부    록 .....	107
■ Abstract .....	125



## 표 목 차

<표 II-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지원대상 .....	14
<표 II-2>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통계청 주요조사의 정의 비교 .....	16
<표 II-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형태 정의 .....	16
<표 III-1> 조손가족 수 추정결과 .....	19
<표 III-2> 가족유형별 자녀·손자녀수 .....	20
<표 III-3> 가족유형별 평균 자녀·손자녀연령 .....	21
<표 III-4> 가구주의 배우자 여부 .....	22
<표 III-5> 가족유형별 (조)부모연령 .....	23
<표 III-6> 가족유형별 가구원수 .....	24
<표 III-7> (조)부모의 육체적·정신적 장애 .....	25
<표 III-8> (조)부모의 활동제약 .....	26
<표 III-9>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건강평가 .....	27
<표 III-10>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유병여부 및 치료여부 .....	27
<표 III-11>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스트레스 정도 .....	29
<표 III-12>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자살 충동 .....	30
<표 III-13>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자살 충동 이유 .....	30
<표 III-14>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주관적 만족감 .....	31
<표 III-15> (조)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	32
<표 III-16> 차소유 여부 .....	35
<표 III-17> 주거지역 .....	35
<표 III-18> 주거지역별 주거형태 .....	36
<표 III-19> 소득의 개념정의 .....	38
<표 III-20> 가족유형별 소득구조 .....	39
<표 III-21>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	41
<표 III-22>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	42

<표 III-23> 미취학자녀(6세 이하) 보육방법 .....	45
<표 III-24> 초등학생(7-13세) 보육방법 .....	46
<표 III-25> 학년과 만나이간의 관계 .....	50
<표 III-26> 초등학교 진입 · 비진입아동비율 .....	51
<표 III-27> 중학교 진입 · 비진입아동비율 .....	51
<표 III-28> 고등학교 진입 · 비진입아동비율 .....	52
<표 III-29> 문항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정도 .....	53
<표 III-30>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정도 .....	54
<표 III-31> 문항별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 .....	54
<표 III-32>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 .....	55
<표 III-33> 문항별 청소년 방입 정도 .....	56
<표 III-34> 가구유형별 청소년 방입 정도 .....	56
<표 III-35> 문항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	58
<표 III-36>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	59
<표 III-37> 문항별 청소년의 반사회적 친구와의 접촉빈도 .....	59
<표 III-38>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반사회적 친구와의 접촉빈도 .....	60
<표 III-39> 문항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 .....	61
<표 III-40>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 .....	61
<표 III-41> 문항별 청소년의 유해약물경험 .....	62
<표 III-42>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유해약물경험 .....	62
<표 III-43> 문항별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	63
<표 III-44>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	64
<표 III-45>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자살충동경험 .....	64
<표 III-46>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가출경험 .....	65
<표 III-47>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상태 .....	66
<표 IV-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74
<표 IV-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75
<표 IV-3> 대리양육가정위탁 .....	77
<표 IV-4> 드림스타트 .....	78

<표 IV-5> 아이돌보미사업 .....	79
<표 IV-6> 기초생활보장 개요: 생계비 지원 .....	81
<표 IV-7> 디딤씨앗통장(CDA) .....	82
<표 IV-8>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84
<표 IV-9>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경감기준 .....	85
<표 IV-10>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	86
<표 IV-11>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87
<표 IV-12>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의 내용 .....	91
<표 IV-13>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가구 기준) .....	91
<표 IV-14> 가사도우미 활용비용 추정 .....	92
<표 IV-15>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소득 .....	96
<표 IV-16> 소득수준별 가구수 추정 .....	97
<표 IV-17> 소득수준별 수급가구수 추정 .....	97
<표 IV-18> 조손가족관련 지원정책 요약 .....	99

## 그림 목 차

<그림 Ⅲ-1> 전체가구대비 및 유자녀가구대비 조손가족 비율 .....	20
<그림 Ⅲ-2> 가족유형별 아동연령 분포 .....	22
<그림 Ⅲ-3> 가족유형별 (조)부모연령 분포 .....	23
<그림 Ⅲ-4> 조손가족의 주요 소득원 .....	34
<그림 Ⅲ-5> 가족유형별 소득구조 .....	39
<그림 Ⅲ-6>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	41
<그림 Ⅲ-7>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	43
<그림 Ⅲ-8>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10분위 .....	44
<그림 Ⅲ-9>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10분위 .....	44



# I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연이은 금융발 경제위기 여파와 노동환경의 변화, 개인휴대통신의 발달과 보급 등으로 가족의 의미와 구성이 변화하고 가족간 생활방식의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의 다양성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가 변화하면서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가와 함께 조손가족 역시 증가해 왔음.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시 조사한 동거자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손가구는 전체 가구의 0.36%에 불과함. 그러나 1995년 35,194가구, 2000년 45,224가구, 2005년 58,101가구로 지난 10년 동안 65.1%로 크게 증가해옴.
  - 이같은 조손가족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실태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은 체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음.
- 최근 조손가족의 증가와 이들 가족이 경험하는 삼중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손가족의 객관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부재함.
  - 2000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조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옴. 그러나 대다수 기존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조부모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 조손가족의 수는 2-300가구에 불과함.
  - 여성가족부 역시 2007년도에 전국 600여 가구를 조사한 바 있으나, 대상가구의 대다수가 국가지원 대상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한계가 있음(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2010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이는 행정인력에 의존한 조손가구 인적사항 파악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조손가족실태조사」



#### 4 ●●●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는 2010년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의 손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각 동/읍/면별 7가구 임의균등 할당 가구표집에 의해 전국 12,750가구를 추출하여 가구 정보와 조부모 및 손자녀의 생활상태에 관한 기초문항을 조사한 것임.

- 여성가족부(2007, 2010)의 조사결과를 위시하여, 그동안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
  - 조손가족은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 혹은 조모나 조부가 손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가족형태로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과 함께 경제적 부양, 조부모의 질병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여성가족부, 2007; 2010).

※ 2007, 2010년도 실태조사를 통해서본 조손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의 낮은 학력(국졸이하: 79.5%)과 낮은 소득(100만원 미만: 82.0%)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여성가족부, 2007). 2010년 가구조사결과 역시 조부모의 평균연령은 72.6세이며, 조부모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82.3%, 중졸 10.0%, 고졸이상 7%에 불과함(여성가족부, 2010). 특히 이들은 손자녀의 '친부모 이혼이나 재혼'(53.2%), '친부모 가출이나 실종'(14.7%), 친부모의 질병이나 사망(11.4%) 등에 의해 조손가구를 형성한 것으로 응답(여성가족부, 2010)

- 이같은 조손가족의 어려운 현실에 주목하여, 최근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 80개 가운데 조손가족지원에 관한 것이 하나의 과제로 설정된 바 있음.
  - 2011년부터 조손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이들 손자녀에 대한 학습·정서·문화생활 지원 등 통합적 지원사업이 시범운영됨.
  - 또한 최근 조손가족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손가족지원법안'이 발의('11.2.14)된 바 있음.
- 법안발의, 공정사회 계획 추진, 조손가족 시범사업 운영 등 대외환경은 점차 조손가족지원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조손가족에 대한 기초통계, 정책추진 방식 등에 대한 논의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바 없음.

- 선행연구를 통해 조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은 확인되고 있으나, 주 양육자가 조부모라는 점에서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양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논거는 미비.
- 조손가족의 어려움과 이들 가구 손자녀들의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는 부분적이며, 특히 이들이 보여주는 정서·심리적인 특성이나 손자녀의 학교생활 등이 다른 가족·가구의 동일연령대 자녀들과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지, 혹은 이들 조부모들은 다른 가구의 양육자들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부재함.
- 이같은 자료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조손가족 우선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의 미흡과 연계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시통계자료 가운데 가구유형별 재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들을 활용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구와 양부모, 한부모가구의 특성 및 손자녀의 생활세계를 비교분석함.
- 가구유형별로 양육자(조부모, 양부모, 한부모)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심리정서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조손가족에 대한 적실한 지원방안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석할 것임.
-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손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함.

##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 □ 조손가족의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 조손가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조손가족의 규모 및 주요 특성을 살펴봄.
- 기존 실태조사는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손가족의 범주와 개념을 살펴보고, 기존통계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조손가

## 6 ●●●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족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함.

### ○ 조손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검토

- 선행연구를 통한 조손가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관련정책을 검토함.

### □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조손가족의 생활실태를 재분석함.
  -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활상태, 손자녀양육의 어려움 등을 파악.
  - 양부모 및 한부모가구 등과의 비교를 통해 손자녀양육의 특성을 분석.
  - 조손가족 손자녀들이 당면한 학업 및 진학상태, 학교생활 및 유해환경 접촉빈도 등을 양부모, 한부모가구의 청소년들과 비교분석.
-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이들을 지원하는 담당공무원 등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분석.

### □ 지원대상 조손가구의 추계와 조손가족지원방안

- 조손가족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지원대상 조손가구 추계.
- 조손가족지원과 연관된 유관정책의 검토 및 효과적인 조손가족지원방안 제시.

## 2) 연구방법

### □ 문헌연구

- 조손가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조손가족지원과 연관된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을 검토.
  - 기존 노인 및 아동지원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조손가족 지원의 사각지

대 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체계의 특징 및 문제점 검토.
- 효과적인 조손가족지원방안 및 주요 지원내용 검토.

#### □ 전문가 자문

- 노인 및 아동복지 전문가 자문.
-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 □ 거시통계 재분석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재분석을 통해 저소득 조손가족의 규모 추정 및 조손가족 생활실태 파악.
- 사회조사 및 위기청소년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조손가족의 조부모 및 손자녀 특성 분석.

#### □ 조손가족의 조부모 인터뷰

- 전남 순천시 ‘희망꿈돌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조손가구 심층 인터뷰 진행.
  - 조부모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분석.
  - 손자녀 양육 및 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부모들의 고민과 지원욕구 분석.
- 희망꿈돌이사업 학습도우미 면담.
  -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업상황 및 학업지원서비스 효과.
  - 효과적인 조손가족지원 방안에 대한 견해 및 정책제안 청취.

### 3) 연구의 의의

#### □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 정책추진을 위한 정확한 자료생산.
  - ‘조손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한 정책의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지원대상가구의 추계치는 부재.

- 따라서 이를 위한 정확한 지원규모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
- 특히 조손가족 손자녀들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업성취도 등에 관한 비교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관련 데이터 생산.

- 효율적인 조손가족지원 방안 제시.
  - 기존 지원정책의 주요 특징 및 문제점 검토.
  - 조손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및 지원서비스 제언.

#### 4) 연구의 한계

□ 기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의 역시 제한적임.

- 조손가족은 가구단위의 체계적인 표집을 통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기에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손가족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실태조사만이 이들 형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정책지원 욕구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기존의 유사통계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조손가족의 조부모나 손자녀의 양육 상황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각기 활용한 자료들의 모집단이나 조사방법의 차이로 본 분석 결과가 갖는 함의는 제한적임.
  - 특히 조부모의 연령이나 지위, 혹은 손자녀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조손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기에는 조손가구의 사례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음.
- 또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만을 재분석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정책제언에 있어 조부모나 손자녀들의 주관적인 지원서비스의 욕구 등은 상세히 반영되지 못하는 고유한 한계가 있음.

## II

### 이론적 논의

- |                 |    |
|-----------------|----|
| 1. 선행연구 검토      | 11 |
| 2. 조손가족의 개념과 범주 | 13 |



## 1. 선행연구 검토

- 조손가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 후반 몇몇의 석사논문으로부터 비롯됨.
  - 그러나 초기 연구는 통상적인 조부모의 손자녀양육과 같은 포괄적 의미로서 접근하기 시작(배경미, 1988; 한경희, 1988). 따라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생계와 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지금의 ‘조손가족’의 개념과는 다소 맥락적인 차이가 있음.
- 조손가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후반 경제위기라는 사회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음.
  - 가족해체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가족유형의 하나인 조손가족은 세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으나, 이때까지도 조손가족은 사회해체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현한 비정상적인 가족 유형으로 다루는 경향이 발견됨(변화순 외, 2000).
  - 1995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2세대가구 가운데 조손가구를 분리 발표하기 시작.
- 조손가족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의 경우 조손가족은 조부모가장가정(Grandparent-Headed Home), 세대를 건너 뛴 가구(Skipped-Generation Household), 손자녀양육 조부모(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 보호적 조부모(Custodial Grandparents), 조부모 양육자(Grandparent Caregivers), 양육자로서의 조부모(Grandparents as Caregivers), 조모친족관계 양육제공자(Grand-mother Kinship Care Providers) 등으로 명명(Burnett, 1997; Jendrek, 1994; 김혜선, 2004:8에서 재인용)
  - 이러한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주로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지칭함.
  - 따라서 조손가족은 사고나 질병, 실직,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기



성의 가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성인자녀가 더 이상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성인자녀의 취업과 사회참여로 인하여 조부모가 일시 혹은 특정 시기까지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 대별 가능(이미영, 2007; 이상현, 2005; 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그러나 성인자녀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손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시기 동안 한정된 부모역할을 수행 하는 것 이상의 역할과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로 지원대상 가구로 부각됨.

○ 2000년 이후 한국사회 역시 조손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거나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님.

- 대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상황에 주목. 예컨대, 대리부모로서 조부모가 직면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법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거나(김정은, 2001; 박창기, 2002; 김혜선, 2004) 손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사회 적응 문제를 지적해옴(성지혜, 2001; 신은정, 2004; 김혜선, 2004).
-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체로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적잖은 한계가 있음.

○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바 있으나, 이 역시 이들 가구 손자녀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어 있음(여성가족부, 2007; 2010).

- 2007년 최초로 전국조손가족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전국에 거주하는 조손 600가구의 조부모 응답에 기초하고 있어 손자녀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조부모의 응답에 의존한 것임.

※ 특히 대표성 있는 표집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현재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그 결과 조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조부모의 질병 등으로 인한 손자녀돌봄의 과중한 부담 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조손가족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2010년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행정인력에 의존한 조사라는 점에서 조손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간략한 생활실태 관련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주민등록전산망 조손가구형태로 파악된 총 51,852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 동, 읍, 면 3,172개소에서 각 7가구씩 임의표집한 22,204개를 표본으로 설계하고, 행정인력을 동원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그러나 이 역시 행정인력에 의존하여 조손가구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기본적인 가구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각 동, 읍, 면 당 7개 표본을 목표로 임의표집 방법에 의해 수집하였으나, 그 회수율이 57.4%에 그치고 지역별 조손가족에 비례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짐.
- 두 조사결과 모두 대다수 조손가족 월평균 소득이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으로 인한 노인의 만성 질환 등으로 신체·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짐. 특히 2010년 조사의 경우, 이들 손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로지도 및 학습지원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됨.
- ※ 18세 이하 조손가구의 손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54.0%, 취업 의사를 보이는 응답자 15.0%, 직업교육이나 특기교육 받기를 원하는 경우 8.7%,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남. 특히 조손가족의 중학생 손자녀들조차 진학 의향이 고등학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들 역시 저소득층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여성가족부, 2010).

## 2. 조손가족의 개념과 범주

### 1) 조손가족의 정의

- 대체로 선행연구에서 조손가족은 조부모가 그들의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일컫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
- 그 가운데서도 자녀의 사고나 질병, 실직,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손자녀 돌봄의 책임과 부담이 결코 일시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손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여받은 조부모 가구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현행 법률 및 지침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조손가족의 범위는 공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매우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II-1〉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지원대상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서 한부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자</li> <li>②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유기 등으로 인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li> </ul> </li> </ul> |
|---|

자료: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11), p.35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부모 중 한쪽이 없는 유자녀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행 조손가족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조손가족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요건, 조부모요건, 손자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서 재정리).
  - 부모: 사망, 장애·질병, 장기복역, 이혼·유기, 가출, 장기실직 등으로 아동을 사실상 부양하지 못함.
  - 조부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5세 이상임.
  - 손자녀: 첫째자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으며 18세 이상인 경우 1) 대입 또는 취업준비 중이거나(18세까지) 2) 취학·군복무 중(22세 미만) 또는 3) 중증장애인임.

## 2)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손가족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조손가족의 정확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적실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전국 대도시 및 중소도시 등 거주 지역은 물론 조손가족의 계층적, 연령적 특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사회조사 결과 등을 재분석하고, 이들을 양부모 및 한부모가족과 비교해봄으로써 조손가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이같은 거시통계자료는 학계나 법률적인 정의에 맞춘 가족/가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손가족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함.
  - 본고의 경우, 조손가족을 정의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손가족의 지원 근거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기준을 참조하되, 지원사업을 위한 조손가족 선정의 기준과 실태조사자료에서 분석가능한 범주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의된 조손가족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범주로 정의하되, 기준이 모호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은 조손가족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쟁점이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임.

- **동일 주민등록 vs 동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가구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 만, 인구주택총조사 및 사회조사 등 통계청 주요 조사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가구의 단위를 설정함.
- **양육권자 vs 가구주:** 사업 상의 지원대상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양육 권이 지정되어 있고(형식적 요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함(실질적 요건). 그러나 주요 조사에서 사용하는 ‘가구주’의 개념은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 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II-2〉 한부모가족지원사업과 통계청 주요조사의 정의 비교

구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통계청 주요조사
가구의 범위	동일 주민등록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부모의 정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구주인 부모

-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형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조손가족 : 65세 이상 조모 또는 조모와 18세 미만 손자녀가 동거하며, 부모와 18세 이상 손자녀가 없는 가족.
-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1인과 18세 미만 자녀가 동거하며, 18세 이상 자녀가 없는 가족.
- 양부모가족: 부모 양쪽과 18세 미만 자녀가 동거하며, 18세 이상 자녀가 없는 가족.

〈표 II-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형태 정의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65세 이상 조부모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이상	- (무관)	- (무관)
부모	없음	부 또는 모 중 1인	부모 2인
18세 이상 (손)자녀	없음	없음	없음
18세 미만 (손)자녀	있음	있음	있음

### III

## 조손가족의 생활실태

1. 조손가족의 규모 및 가구특성	19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실태	25
3. 손자녀돌봄 및 손자녀의 학교생활	45
4. 소결	67



## 1. 조손가족의 규모 및 가구특성

### 1) 조손가족의 규모

- 조손가족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조손가족은 전체 가구의 0.4%에 해당하며, 전국에 약 6만 3천여 가구의 조손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주택총조사(2005)를 통해 조손가족의 비중을 추정해본 결과, 조손가족은 전체가구의 0.4%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가구의 3.3%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 및 29.6%를 차지하는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경우 매우 적은 비중임.
- 그러나 조손가족은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유자녀가족 중에서는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록 그 수는 작지만 유자녀가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한부모가족은 유자녀가족의 9.9%, 양부모가족은 8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손가구의 숫자를 추정해 보면, 전국에 6만 2천 628가구의 조손가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는 조부 또는 조모 가운데 1인 이상과 18세 미만 손자녀가 동거하며, 18세 이상 손자녀나 부모가 없는 가구로 한정된 것임. 따라서 실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양육 역할 상의 조손가족 정의와는 일정정도 차이가 있는 가구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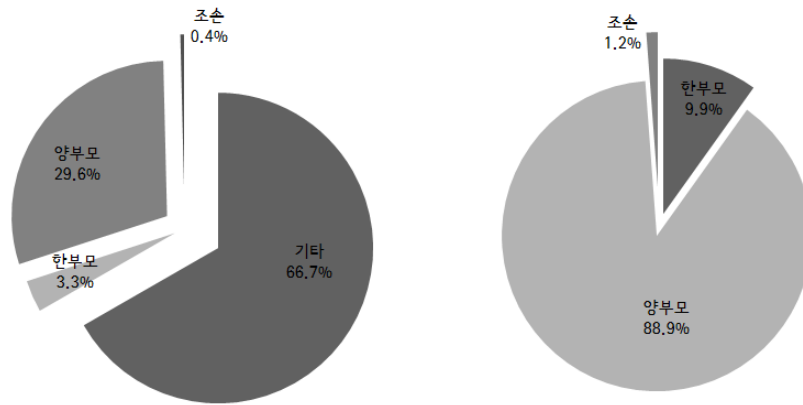
〈표 Ⅲ-1〉 조손가족 수 추정결과

(단위: 명, %)

	유자녀가족			기타가족	전체
	조손	한부모	양부모		
표본 사례수	1,248	10,423	93,675	211,190	316,536
모수추정 사례수	62,628	523,160	4,701,592	10,599,749	15,887,128
전체가구대비 비율	0.4	3.3	29.6	66.7	100.0
유자녀가족대비 비율	1.2	9.9	88.9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그림 Ⅲ-1〉 전체가구대비 및 유자녀가구대비 조손가족 비율

## 2) 조손가족의 가구구성 형태

- 조손가족의 가구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가족유형별 양육 자녀수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자녀·손자녀수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적음.
  - 양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인 71.1%이며, 그 가운데 2명인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61.4%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2명 이상인 경우가 55.8%로 1명인 경우(44.2%)보다 더 많음. 반대로 조손가족에서는 손자녀가 1명인 경우가 60.7%로서 과반수이상을 차지함.
  - 결과적으로 조손가족의 평균 손자녀수는 1.45명으로, 한부모가족의 1.64명, 양부모가족의 1.81명에 비해 돌보는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p<.01$ ).

〈표 Ⅲ-2〉 가족유형별 자녀·손자녀수

(단위: 명, %)

자녀·손자녀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248(100.0)	10423(100.0)	93675(100.0)
1명	758(60.7)	4606(44.2)	27104(28.9)
2명	425(34.1)	5043(48.4)	57473(61.4)

자녀·손자녀수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3명	57(4.6)	713(6.8)	8544(9.1)
4명 이상	8(0.6)	61(0.6)	554(0.6)
평균 자녀·손자녀수 (표준편차)	1.45(0.61)	1.64(0.64)	1.81(0.6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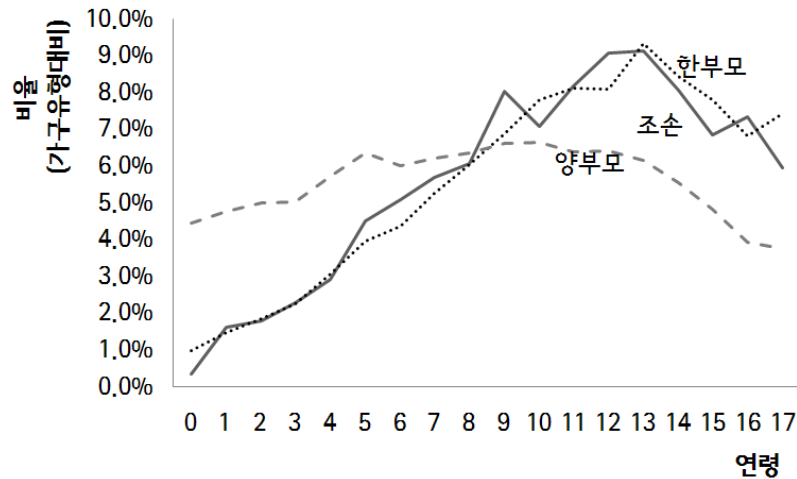
- 자녀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이 양부모가족에 비해 자녀·손자녀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3세 자녀·손자녀가 가장 많은 역 V자형의 가파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양부모가족의 경우 평탄한 모양의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조손가족의 평균 손자녀연령은 만 10.6세, 한부모가족은 만 10.7세, 양부모 가족은 만 8.4세로 나타났음.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녀·손자녀연령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이들 집단과 양부모가족의 자녀·손자녀연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p<.01$ ).
  - 이같은 차이는 조손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양부모가족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자녀·손자녀출생 이후 한부모 혹은 조손가족의 형태로 전환하여 추가출산 가능성이 희박함.

〈표 Ⅲ-3〉 가족유형별 평균 자녀·손자녀연령

(단위: 명, 세)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아동수	1793	16892	163465
평균 자녀·손자녀 연령 (표준편차)	10.61(4.14)	10.74(4.26)	8.44(4.8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그림 Ⅲ-2〉 가족유형별 아동연령 분포

- 한편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7.9%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손가족실태조사(한조부모가 83%)와는 차이가 있음. 조손가족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주민등록상 기재에 근거한 조부모 동거임에 비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실제로 한 집에 거주하는 조부모를 동거자로 정의하는 차이와 연동됨.

〈표 Ⅲ-4〉 가구주의 배우자 여부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248(100.0)	10423(100.0)	93675(100.0)
배우자 없음	526(42.1)	10423(100.0)	-
배우자 있음	722(57.9)	-	93675(10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조손가족의 조부모 연령을 살펴보면, 조부 또는 조모의 연령은 평균 69세로 나타났으며, 70대 이상인 경우가 43.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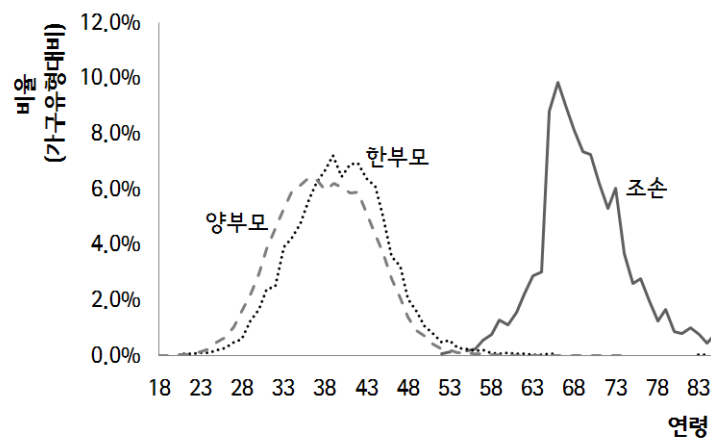
-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60대가 53.7%, 70대가 38.6%였으며 80대 이상인 경우도 4.6%로 나타나 손자녀돌봄에 있어 조부모의 신체적 부담과 이로 인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한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평균연령은 40세, 양부모가족 부모의 평균연령은 38세로 나타남.

〈표 Ⅲ-5〉 가족유형별 (조)부모연령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가구수	1889(100.0)	10396(100.0)	183569(100.0)
20대이하	0(0.0)	304(2.9)	11915(6.5)
30대	0(0.0)	4682(45.0)	98124(53.5)
40대	0(0.0)	4996(48.1)	69819(38.0)
50대	58(3.1)	387(3.7)	3550(1.9)
60대	1015(53.7)	25(0.2)	152(0.1)
70대	729(38.6)	0(0.0)	7(0.0)
80대이상	87(4.6)	2(0.0)	2(0.0)
평균(표준편차)	69.22(5.3)	39.84(5.7)	37.96(5.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그림 Ⅲ-3〉 가족유형별 (조)부모연령 분포

- 가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형태별 가구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조손가족의 규모는 양부모가족보다는 적고, 한부모가족보다는 크게 나타남.
- 조손가족은 과반수에 해당하는 48.2%가 3명의 가구원이며, 2명인 경우와 4명인 경우가 각각 24.6%, 23.1%로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한부모가족 역시 3명인 경우가 45.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2명인 경우가 35.6%임. 양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57.2%가 4명의 가구원이며, 다음으로는 25.4%가 3명으로 구성된 가구임.
  - 평균적으로 조손가족은 3.1명의 가구원수를 보여주며, 한부모가족은 그보다 작은 2.9명임. 양부모가족은 4.0명으로 구성되어 가장 가구원이 많은 가구형태임.
  -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 또는 양부모가구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세대가 없는 가족이므로 많은 가구원 수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연동될 것으로 예측됨.

〈표 Ⅲ-6〉 가족유형별 가구원수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가구원수	1249(100.0)	10424(100.0)	93674(100.0)
2명	307(24.6)	3708(35.6)	0(0.0)
3명	602(48.2)	4770(45.8)	23773(25.4)
4명	288(23.1)	1493(14.3)	53572(57.2)
5명	42(3.4)	358(3.4)	13313(14.2)
6명 이상	10(0.8)	95(0.9)	3016(3.2)
평균 가구원수(표준편차)	3.08(0.83)	2.89(0.86)	3.96(0.7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실태

### 1)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과 스트레스

- 부모 및 조부모 등 가구주 부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조손가족 조부모는 연령의 특징상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인구주택 총조사 재분석 결과 역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음. 즉, 조손가족 조부모의 약 3명 가운데 한명은 장애가 있고 약 5명 중 한명은 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의 조부모들 스스로가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달하는데, 이는 한부모가족 가구주(4.3%)의 7배, 양부모가족 가구주 부부(1.5%)의 19배 수준에 달하는 것임.
- 장애유형별로는 ‘육체적 제약이 있다’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4.6%는 시각·청각장애, 2.2%는 정신제약을 보고하고 있음.

〈표 Ⅲ-7〉 (조)부모의 육체적·정신적 장애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890(100.0)	10396(100.0)	183568(100.0)
없음	1341(71.0)	9947(95.7)	180764(98.5)
있음	549(29.0)	449(4.3)	2804(1.5)
시각청각장애*	86(4.6)	53(0.5)	422(0.2)
정신제약*	41(2.2)	65(0.6)	246(0.1)
육체제약*	483(25.6)	304(2.9)	1124(0.6)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중복응답, %는 가족유형 전체 대비 비율임

-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활동제약을 보고한 경우도 21.4%에 달하였는데, 이는 한부모가족 가구주(3.0%)의 7배, 양부모가족 가구주 부부(1.3%)의 16배에 수준이었음.

- 종류별로는 ‘장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17.0%로 가장 높았으며, ‘배우기와 같은 인지활동의 제약’을 보고한 경우도 5.2%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일상적 가사노동과 인지활동에서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손자녀의 돌봄 및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또한 옷입기 등 조부모 자신의 개인유지활동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역시 4.6%에 달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취업활동이 어렵다는 보고도 5.6%로 나타났는데, 노동수요측 요인과 결합되면 실제 취업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론됨.

〈표 Ⅲ-8〉 (조)부모의 활동제약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890(100.0)	10397(100.0)	183568(100.0)
없음	1485(78.6)	10090(97.0)	181199(98.7)
있음	<b>405(21.4)</b>	<b>307(3.0)</b>	<b>2369(1.3)</b>
배우기*	99(5.2)	46(0.4)	302(0.2)
옷입기*	86(4.6)	29(0.3)	147(0.1)
장보기*	321(17.0)	151(1.5)	500(0.3)
취업활동*	105(5.6)	106(1.0)	655(0.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주: 중복응답, %는 가족유형 전체 대비 비율임

- 한편, 2010년에 조사 발표된 「사회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보면, 조부모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건강에 자신없어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스스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한 결과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구의 양육자는 3.50, 한부모가구는 3.17, 조손 가구 2.58로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

〈표 Ⅲ-9〉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건강평가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10116	3.47	0.770	
가구유형				
조손	91	<b>2.58</b>	0.947	115.583(2)***
한부모	612	3.17	0.875	
양부모	9414	3.50	0.751	

주1)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평가 정도가 높음(1: 매우 나쁘다, 5: 매우 좋다)

주2)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마찬가지로 가구유형별로 응답 전 2주일 동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아팠던 적이 있는지, 아팠던 적이 있었다면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구 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조손가구 노인양육자들의 아팠던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49.5%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0〉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유병여부 및 치료여부

(단위: 명, %)

구분	유병여부		합계	$\chi^2(df)$	치료여부		합계	$\chi^2(df)$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1354 (13.4)	8762 (86.6)	10116 (100.0)		1278 (94.3)	77 (5.7)	1355 (100.0)	
가구유형								
조손	45 (49.5)	46 (50.5)	91 (100.0)	123.854 (2)***	44 (97.8)	1 (2.2)	45 (100.0)	2.447(2)
한부모	117 (19.1)	494 (80.9)	611 (100.0)		114 (96.6)	4 (3.4)	118 (100.0)	
양부모	1192 (12.7)	8222 (87.3)	9414 (100.0)		1120 (94.0)	72 (6.0)	1192 (100.0)	

주: \* p &lt; .05, \*\* p &lt; .01, \*\*\* p &lt;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결과 역시 조부모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음(여성가족부, 2010).

- 전체 응답자 12,750명 가운데 6개월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40.8%이며, 크고 작은 잦은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33.1%로, 무려 질병으로 인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3.9%에 달함.
- 조손가족의 조부모 인터뷰에서도 이같은 건강상의 문제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음.

“—뇌경색에 8년 전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한 달만에 완쾌되었어요. 얼마만큼 운동을 하고 죽을려고까지 했어요. 이를 악물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29일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년차 됩니다. 그 약은 계속 안먹으면 안된대요. 아침약 8가지, 저녁약 5가지 그렇게 먹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합병원이예요.—” (외손자 양육 할아버지)

“—저도 보기에는 넘대대한테 어찌 손주들 키우면서 딱 아프기 시작하더니 허리가 고장이 나더니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십시오. 하는데 수술할 형편도 못되서 안했는데... 어느 날 방바닥에서 카페트를 밟아서 넘어져서 무릎의 연골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골이. 의사선생님 말씀은 연골이 찢어졌다고 하는데 요것도 어떻게 수술을 해서 해야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그래서. 행여나 아이들이 할머니가 병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저 거들이 밥도 해먹고 해야하는 문제도 어떻게 이런저런 문제로.—” (친손녀 양육 할머니)

○ 이러한 사실은 곧 조손가구 조부모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기간 동안 손자녀 돌봄과 가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 조손가족의 학습지원을 하는 실무자에 의하면 조부모들의 건강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과 함께 치료시기에 손자녀를 대신하여 돌봐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지적함.

“—60대 정도... 아이는 6학년이구요. 6학년 1명하고 중3짜리 1명이 있구요. 지금 6학년인 손녀는 정말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키웠는데요. 할머니가 몸이 약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이 2명을 키우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무릎관절이 다 마모가 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고치셔야 한다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앓고 서기가 너무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여쭈봤더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

이 없으시니까 애들 키우고 하시면서 돈이 전혀 없으시니까 아예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물론 할머니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타까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손자녀를 키우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훨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면에서도 손자녀를 키우시고 있는 할머니잖아요. 그런 분이 몸을 많이 쓰셔야 하니까 다리가 불편하신 분을 고쳐줄 수 있는 자원봉사나 그런 데를 연계해서 고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릎연골 수술.. 저는 그게 너무 가슴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게 되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힘들겠지만 어떻게 연계가 되면 할머니 건강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조손가족의 손녀에 대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 전남 순천시 꿈돌이 선생님)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스트레스와 자살충동,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의 정신건강은 신체적인 건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만족감 등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응답 전 2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는가를 생활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양부모 가구나 한부모 가구에 비해 조부모의 스트레스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흥미로운 점은 한부모가구의 자녀 양육자들은 가정생활영역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임.

〈표 Ⅲ-11〉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스트레스 정도

(단위: 점)

구분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스트레스
전체 평균(N=1569)	2.63	3.07	2.93
가구유형			
조손	2.68	2.51	2.76
한부모	2.78	3.00	2.98
양부모	2.62	3.08	2.93
F	14.605(2)***	9.739(2)***	5.341(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1: 전혀 느끼지 않았다, 5: 매우 많이 느꼈다)

주2) \* p < .05, \*\* p < .01, \*\*\* p <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한편, 응답 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이 역시 한부모가구 양육자가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구 양육자는 7.7%, 조손가구 양육자는 1.1%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Ⅲ-12〉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자살 충동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합계	$\chi^2(df)$
전체	818(8.1)	9296(91.9)	10114(100.0)	
가구유형				
조손	1(1.1)	89(98.9)	90(100.0)	49.703(2)***
한부모	93(15.2)	518(84.8)	611(100.0)	
양부모	724(7.7)	8689(92.3)	9413(10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표 Ⅲ-13>은 자살하고 싶다고 생각한 주된 이유를 물어본 결과로,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부모가구 양육자의 경우 63.2%가 응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충동이 심각함을 알 수 있음.

〈표 Ⅲ-13〉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자살 충동 이유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신체·정신적 질환, 장애 때문에	직장문제 때문에 (실적, 미취업 등)	외로움, 고독 때문에	가정불화로 인해	기타	합계	$\chi^2(df)$
전체	380(46.2)	43(5.2)	41(5.0)	94(11.4)	173(21.0)	91(11.1)	822(100.0)	
가구유형								
조손	1(50.0)	0(0.0)	0(0.0)	0(0.0)	0(0.0)	1(50.0)	2(100.0)	17.502 (10)
한부모	60(63.2)	2(2.1)	5(5.3)	6(6.3)	14(14.7)	8(8.4)	95(100.0)	
양부모	319(44.0)	41(5.7)	36(5.0)	88(12.1)	159(21.9)	82(11.3)	725(10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스트레스나 자살충동은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에게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즉, 양육자의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는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부모가구 양육자의 주관적 만족감은 2.68, 조손가구 양육자의 만족감은 2.40으로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함.

〈표 Ⅲ-14〉 가구유형별 양육자의 주관적 만족감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10116	3.15	0.953	
가구유형				
조손	91	2.40	0.858	114.311(2)***
한부모	612	2.68	1.014	
양부모	9414	3.19	0.938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사회조사(2010)

- 손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사유로는 자녀의 이혼이나 사업실패 등과 같이 주로 자녀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 때문임. 이러한 과정에서 조부모 자신도 자녀의 이혼, 경제적 실패 등에 대해 부모로서 자책을 하게 되는 등 심리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어 심리적 안정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조부모의 심리적 불안정은 훈육자로서 역할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함. 조손가족지원서비스 담당자들은 조부모들 역시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녀를 양육하게 되므로 조부모의 심리적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제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의 조부모님들은 너무 자책이 크시더라고요. 대개 조손가정이 다른 하겠지만 대개는 자녀들의 이혼으로 아이들을 맡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아픈거예요. 이분들도 너무 상처가 많으신거예요. 이 분들의 마음도 좀 만져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아이들에게 야단도 치고 훈육도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너무 애잔하고 아프고 그런거예요.” (꿈돌이 선생님 N)

## 2)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하여 가구유형별로 경제활동상태와 고용지위, 주소득원 등을 살펴봄.
- 먼저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73.5%가 미취업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상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한부모가족 및 양부모가족의 미취업률은 각각 32.8%, 33.7%로 나타남.
- 취업한 조부모들의 대다수인 68.8%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공, 사무·서비스·판매직 등 일정 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에의 종사비율은 매우 낮아 농림어업 외에 단순노무비율은 12.4%를 차지함. 결국 이러한 취업형태는 조부모의 취업상태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표 Ⅲ-15〉 (조)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890(100.0)	10394(100.0)	183556(100.0)
미취업	1390(73.5)	3410(32.8)	61830(33.7)
취업	500(26.5)	6984(67.2)	121726(66.3)
의회의원·전문가*	10(2.0)	802(11.5)	19609(16.1)
기술공*	12(2.4)	566(8.1)	13397(11.0)
사무·서비스·판매직*	55(11.0)	3196(45.8)	48356(39.7)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농림어업*	344(68.8)	200(2.9)	3920(3.2)
기능원·장치기계조작*	16(3.2)	1391(19.9)	29276(24.1)
단순노무*	62(12.4)	802(11.5)	6016(4.9)
기타*	1(0.2)	22(0.3)	109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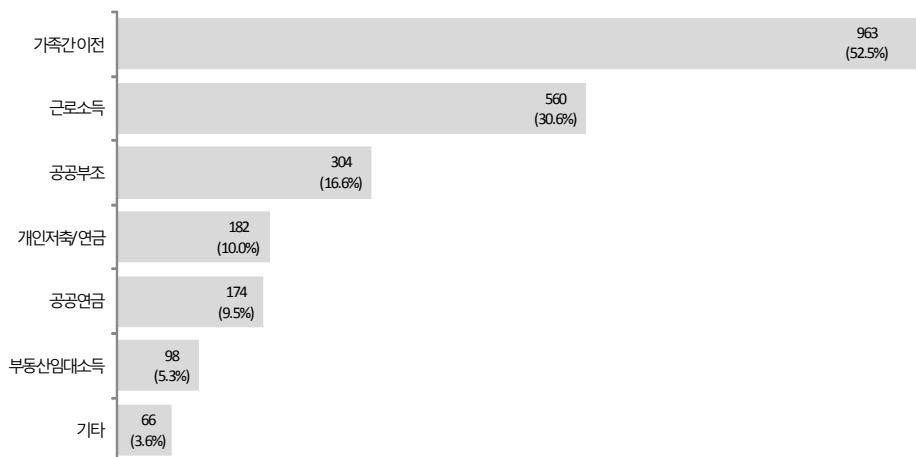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주: %는 가족유형별 취업자 대비 비율임

- 그 결과, 조부모의 생활비 원천이 주로 가족간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 공공부조 순으로 나타남.<sup>1)</sup>
- 조손가족 조부모의 과반수이상인 52.5%가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는 가족간 이전’으로 생활비를 주로 충당한다고 답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라는 응답이 30.6%로 나타남. 그 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등 정부의 보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16.6%였고,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공연금, 개인저축과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의 순서로 나타남.
  - 가족간 이전 등의 사적이전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기 어렵고 소득이 낮은 수준의 가족들 간의 이전은 더욱 불안정하며 낮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김태성, 2003; 손병돈, 1999). 앞서 경제활동상황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조손가족 역시 농림어업과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수준이 안정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한편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부조 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얻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6%에 불과함.
  - 그 외 개인저축과 연금,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조손가족의 주요 생활비 원천으로 응답되는 비율이 각기 10% 이하로 낮음. 이들은 기여에 기반한 급여들로 은퇴이전 일정한 자산축적이

1)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상세한 소득구조 및 소득수준 분석결과를 본절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수준’을 참조.

있었던 경우에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부분 퇴직한 노인들에게 향후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주: 중복응답

〈그림 Ⅲ-4〉 조손가족의 주요 소득원

- 한편,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조손가구의 조부모 심층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아래의 사례를 보면 정확한 직업과 소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일정치 않은 소득과 정부지원을 받은 생활형편을 확인할 수 있음.

“—자영업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럭저럭 돌아다니면서 하죠.—” (외손자를 양육하는 할아버지)

“—저희는 우리 영감님이 가끔 벌기도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일이 별로 없더만요. 70살이 넘으니까. 정부에서 시에서 조금씩 받는게 있어요. 저희도 몰랐는데 유치원때 선생님이 말씀해주셔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나오셔서 참 복잡하대요. 우리 영감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술한잔 안먹을거니까 뱉뉘보셔. 이 잘난 얼굴 사진찍어가지 애기들 찍어가지 집구석 찍어가지 처음엔 하도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왔다갔다하시는 분이 집안 사정을 잘 알고 그러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한 60만원정도. 이쪽저쪽.—” (친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

- 다음으로 이들 가구의 자산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보편적 자산소유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확실히 한부모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조손가족의 보유율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손가족 가운데 차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3.5%로, 한부모가족(49.0%)의 1/3 미만, 양부모가족(87.7%)의 1/6 미만 수준임. 이는 곧 경제활동이나 일상적인 손자녀 돌봄은 물론 노약자 긴급상황 시 이동성의 제한을 의미할 수 있음.

〈표 Ⅲ-16〉 차소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248(100.0)	10423(100.0)	93674(100.0)
차 없음	1079(86.5)	5315(51.0)	11561(12.3)
차 있음	169(13.5)	5108(49.0)	82113(87.7)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주거상황은 도시와 농촌 간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각기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조손가족의 경우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농촌거주 비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조손가족의 경우 62.3%가 동부에 거주하며, 37.7%가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부모가족은 14.1%, 양부모가족은 15.3%만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조손가족의 읍면부의 거주 비율은 매우 높은 편임.

〈표 Ⅲ-17〉 주거지역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248(100.0)	10424(100.0)	93675(100.0)
동부	778(62.3)	8959(85.9)	79348(84.7)
읍면부	470(37.7)	1465(14.1)	14327(15.3)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에 비해 주거상황은 양호한 편이나, 양부모가족과 비교할 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중 월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에 비해 동부와 읍면부 모두에서 주택의 자기소유 비율이 높음. 특히 읍면부의 경우 84.0%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한부모가족(47.0%)이나 양부모가족(58.8%)보다 자가비율이 높음.
  - 그러나 동부의 조손가족 중 22.3%는 월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세의 비중이 12.8%인 양부모가족에 비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보여줌.

〈표 Ⅲ-18〉 주거지역별 주거형태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동부	779(100.0)	8960(100.0)	79349(100.0)
자가	454(58.3)	3082(34.4)	43697(55.1)
전세	113(14.5)	2536(28.3)	23236(29.3)
월세	174(22.3)	2929(32.7)	10130(12.8)
무상(사택/친척집 등)	38(4.9)	413(4.6)	2286(2.9)
읍면부	470(100.0)	1464(100.0)	14326(100.0)
자가	395(84.0)	688(47.0)	8423(58.8)
전세	13(2.8)	222(15.2)	2575(18.0)
월세	30(6.4)	425(29.0)	2233(15.6)
무상(사택/친척집 등)	32(6.8)	129(8.8)	1095(7.6)

### 3) 조손가족 조부모의 소득수준

#### (1) 조손가족의 소득구조

- 본 연구에서는 조손가족의 소득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2009년 국민생활 실태조사자료 결과를 재분석하였음.

- 소득은 시장소득, 경상소득, 총소득, 가처분소득 등 다양한 수준에서 정의될 수 있음. 조손가족의 소득분포를 살펴볼 때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활용함.

-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소득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1차 소득과 비공공 부문에서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값임. 공적이전이 이루어지기 전 소득의 분배를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활용됨.
- 경상소득: 1차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전체 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한 공공부조, 한부모가족수당 등 기타정부 이전을 포괄하는 값임.
- 총소득: 정기적인 경상소득과 일시적인 비경상소득을 합산한 전체 소득.
-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에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등 공적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소득. 공적이전이 이루어진 이후 소득분포를 살펴볼 때 활용됨.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규모를 추계할 때는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소득’을 정의하여 활용함.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소득은 기초생활보장사업상 소득인정액을 준용하여 시장소득과 공적이전 중 사회보험만을 합산한 값으로 정의하였음. 그러나 실제 소득인정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값인데, 본 연구의 소득산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합산하지 않음.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자활근로소득의 일부를 공제한 값임. 기타공적이전소득은 한부모가족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대부분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 중 사회보험만을 기준소득에 포함함.
  - 본 연구의 기준소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지 않은 값임. 조손가구의 경우 '11년부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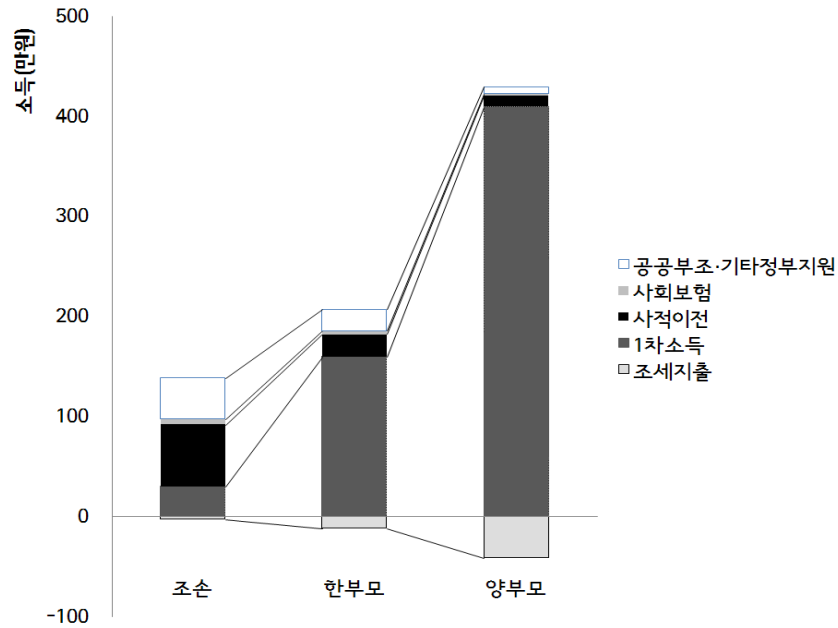
〈표 Ⅲ-19〉 소득의 개념정의

구분	1차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비경상 소득	공적 비소비 지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민간 보험 소득	가족·기타 사적이전 소득	사회 보험 소득	공적 부조 소득	기타 공적이전 소득		
시장소득	○	○	○	○	○					
경상소득	○	○	○	○	○	○	○	○		
총소득	○	○	○	○	○	○	○	○	○	
가처분소득	○	○	○	○	○	○	○	○		○
한부모가족지원 기준소득*	○	○	○	○	○	○				

\* 근접한 소득으로 정의함

- 평균적인 소득구조별 소득을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보다도 소득 수준이 낮으며, 소득의 구조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은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비중있는 소득 원천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1차 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조손가족 소득의 절반 이상은 사적이전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가족과 이웃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임. 다음으로는 공공부조나 기타 수당 명목의 정부지원이 중요한 소득원천임.
  - 이러한 경향은 1차 소득이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한부모 및 양부모가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임.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과 소득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구조면에서는 1차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함.
  - 소득수준면에서는 조손가족이 한부모 가구나 양부모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나, 사적 및 공적이전을 통해 소득차이는 다소 줄어듦. 1차 소득만으로 평가했을 때 조손가족의 소득은 30만원으로 한부모가족(160만원)의 18%, 양부모가족(409만원)의 7%에 불과함. 사적이전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으로 평가하면 조손가족의 소득은 91만원으로 한부모가족(182만원)의 50%, 양부모가족(420만원)의 22% 수준임.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소비지출 등 공공부문의 효과를 합산한 최종 가치

분소득으로 평가할 경우 조손가족의 소득은 135만원으로 한부모가족(195만원)의 69%, 양부모가족(388만원)의 35% 수준임.



〈그림 Ⅲ-5〉 가족유형별 소득구조

〈표 Ⅲ-20〉 가족유형별 소득구조

(단위: 만원)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근로소득(A)	13.3	134.2	325.5
	사업소득(B)	8.3	21.7	76.3
	재산소득(C)	8.4	3.9	7.6
1차소득(A+B+C)		30.0	159.8	409.4
	민간보험소득(D)	0.8	0.0	0.0
	가족·기타사적이전소득(E)	60.2	22.2	11.0
시장소득(A+B+C+D+E)		91.0	182.0	420.4
	사회보험소득(F)	5.7	3.7	1.7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기준소득(A+B+C+D+E+F)		96.7	185.7	422.2
	공공부조소득(G)	21.8	10.3	0.7
	기타정부이전소득(H)	19.4	11.0	6.5
	조세지출(I)	2.5	11.9	41.0
가처분소득(A+B+C+D+E+F+G+H-I)		135.3	195.1	388.4

자료: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분석

## (2) 조손가족의 소득분포

- 조손가족의 소득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각각에 대해 소득수준별 분포와 소득분위별 분포를 살펴봄.
  - 소득수준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조손가족의 명목소득 분포를 분석함.
  - 조손가족이 전체 소득분포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한 소득(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값)으로 소득10분위를 설정하고, 조손가족의 위치를 평가함.

### 가. 명목소득(가구균등화지수 비적용)

- 조손가족의 명목소득분포를 보면, 공적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장소득은 과반수이상인 65%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나 한부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임.
  - 조손가족의 경우 65%가 100만원 미만, 91%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수준이며, 200만원 이상의 시장소득을 가진 가족은 9%에 불과함. 한부모 가족의 경우 양부모가족에 비하면 시장소득이 매우 낮지만, 조손가족에 비하면 높은 편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29% 수준임.
  - 가구유형별로 평균 시장소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집단 모두가 각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조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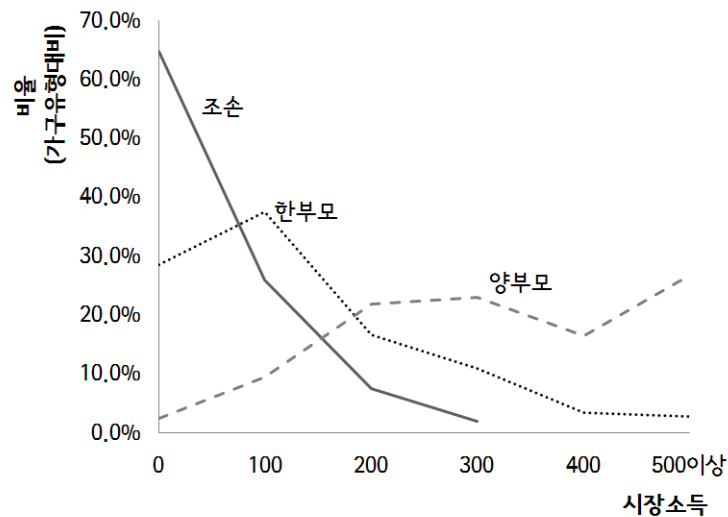
족과 한부모가족은 .05 수준에서, 조손조손-양부모와 조손-한부모는 각각 .01수준에서 차이가 있었음.

〈표 Ⅲ-21〉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54(100.0%)	466(100.0%)	5265(100.0%)
100만원미만	35(64.8%)	133(28.5%)	124(2.4%)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4(25.9%)	175(37.6%)	499(9.5%)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7.4%)	78(16.7%)	1151(21.9%)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1(1.9%)	51(10.9%)	1214(23.1%)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0(0.0%)	16(3.4%)	868(16.5%)
500만원이상	0(0.0%)	13(2.8%)	1409(26.8%)
평균소득(표준편차)	91.04(77.25)	181.99(142.96)	420.43(301.11)

자료: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분석



〈그림 Ⅲ-6〉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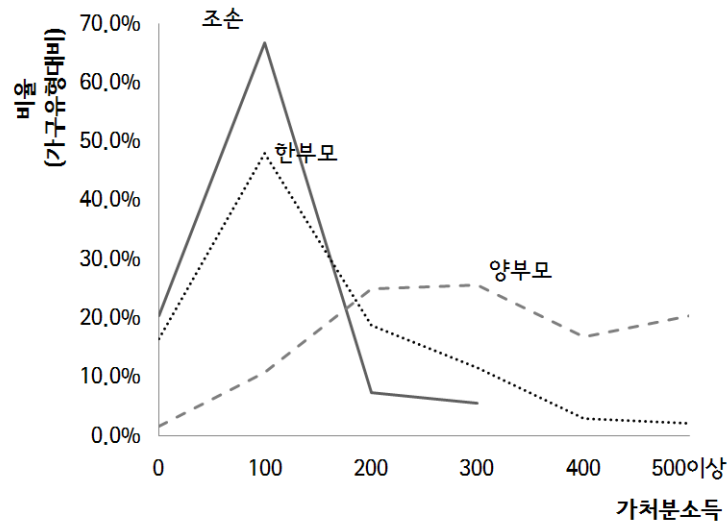
- 공적이전의 효과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조손가족의 67%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한부모가족보다 낮은 소득구간에 많이 분포함.
-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100만원 미만의 조손가족은 20% 수준으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65%)보다 많이 감소함. 시장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던 조손가족의 상당수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으로 이동하여 이 구간에 가장 많은 조손가족(67%)이 분포함.
  - 한부모가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이 모두 역V자 형태를 보여 분포형태가 유사해짐. 그러나 조손가족이 여전히 더 낮은 구간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
  - F-test 결과 가구유형별로 가처분소득에서의 차이는 조손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10수준(어느 정도는 적은 사례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나 두 집단과 양부모 간에는 각각 .01수준에서 차이가 발견됨.

〈표 Ⅲ-22〉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54(100.0)	465(100.0)	5264(100.0)
100만원미만	11(20.4)	77(16.6)	82(1.6)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36(66.7)	223(48.0)	568(10.8)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7.4)	87(18.7)	1315(25.0)
300만원이상 400만원 미만	3(5.6)	54(11.6)	1349(25.6)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0(0.0)	14(3.0)	881(16.7)
500만원이상	0(0.0)	10(2.2)	1069(20.3)
평균소득(표준편차)	135.35(61.38)	195.06(118.25)	388.37(244.28)

자료: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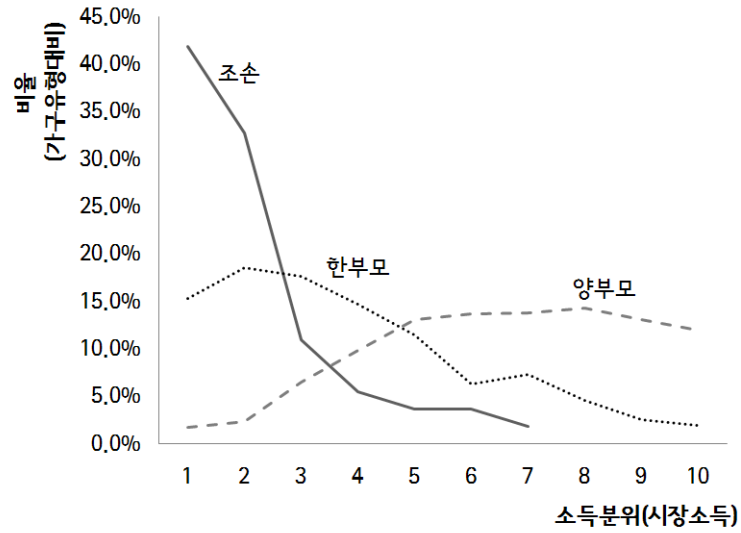


〈그림 Ⅲ-7〉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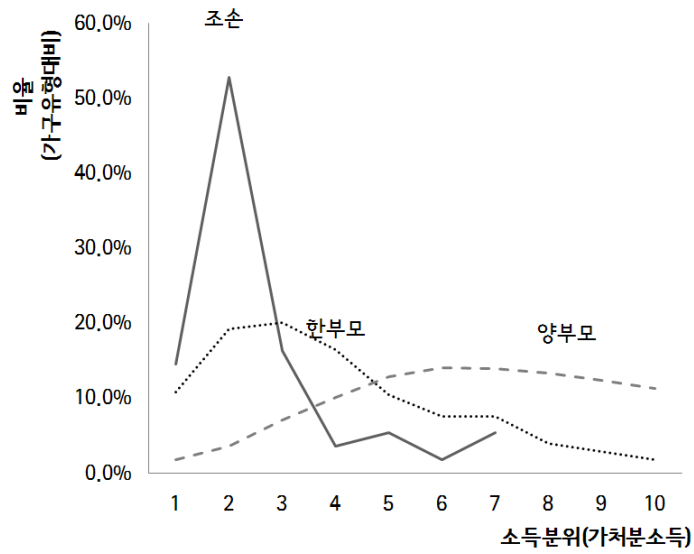
#### 나. 소득 10분위 분포(가구균등화지수 적용)

- 조손가족의 소득 10분위 상에서의 분포를 살펴보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한부모와의 차이가 더 부각됨. 이는 조손가족의 경우 가구원수가 한부모보다 많으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균등화가 적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같은 명목소득이라도 조손가족은 가구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낮은 소득지위에 있음.
-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조손가족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42%, 다음 소득분위에 33%가 분포하여 가장 낮은 소득5분위에 전체 조손가구의 3/4이 분포함.
- 공적이전의 효과가 적용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부모 가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15%, 다음 소득분위에 53%가 분포하여 가장 낮은 소득 5분위에 과반수 이상인 67%가 분포함.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분위에 11%, 다음 소득분위에 19%가 분포하여 가장 낮은 소득5분위에 30%가 분포함. 이는 조손가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그림 Ⅲ-8〉 가족유형별 시장소득 10분위



〈그림 Ⅲ-9〉 가족유형별 가처분소득 10분위

### 3. 손자녀돌봄 및 손자녀의 학교생활

#### 1) 조손가족 손자녀의 돌봄실태

- 조손가족의 경우, 미취학 손자녀돌봄은 주로 조부모에 의해 전담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부모가 돌보지만, 때로 조부모가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는 한부모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보육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의 경우 86.2%가 미취학 손자녀를 주로 조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타가족이나 가사도우미를 보고한 경우도 거의 없음.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52.4%는 주로 부모가, 16.0%는 조부모가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했고, 그 외 기타 가족과 가사도우미를 응답한 경우도 각각 2% 수준임. 양부모가족의 경우에는 75.4%가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조부모의 도움이 6.7%, 기타가족과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각각 1% 수준이었음. 미취학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기타보육시설 등 공식보육시설에서의 이용의 차이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었음.
  -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돌봄의 핵심적인 자원임에 비하여,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은 부/모가 직접 돌보면서 조부모의 도움도 얻고 있었으며, 다른 가족이나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부모가족이나 양부모가족과 비교하여 조손가족은 상대적으로 개별돌봄을 위한 인력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23〉 미취학자녀(6세 이하) 보육방법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325	3042	60899
부모	-	1595(52.4)	45892(75.4)
조부모	280(86.2)	487(16.0)	4109(6.7)
기타가족	3(0.9)	75(2.5)	568(0.9)
가사도우미	0(0.0)	58(1.9)	640(1.1)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유치원	57(17.5)	526(17.3)	9829(16.1)
어린이집	55(16.9)	814(26.8)	11510(18.9)
기타보육시설	0(0.0)	17(0.5)	202(0.3)
학원	14(4.3)	281(9.2)	4389(7.2)
혼자	4(1.2)	122(4.0)	633(1.0)
기타	2(0.6)	12(0.4)	129(0.2)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중복응답

- 조손가족 초등학생 손자녀의 방과후 보육 역시 조부모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다른 가족의 자녀들이 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
-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조부모가 주로 보육한다는 응답이 7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학원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31.1% 수준이었음. 반면 한부모가족의 경우 학원이용비율이 52.6%, 양부모가족의 경우 학원이용비율은 59.2%였음.
- 학원을 이용한 보육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나,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에 노출되고 있는 다른 가족형태의 자녀와 비교할 때 조부모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조손가족의 손자녀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학습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Ⅲ-24〉 초등학생(7-13세) 보육방법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718	6662	59519
부모	-	2868(43.1)	38367(64.5)
조부모	567(79.0)	735(11.0)	2317(3.9)
기타가족	8(1.1)	83(1.2)	270(0.5)
가사도우미	0(0.0)	33(0.5)	230(0.4)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학원	225(31.1)	3503(52.6)	35254(59.2)
혼자	50(6.9)	1371(20.6)	4845(8.1)
기타(보육시설 포함)	18(2.5)	108(1.6)	606(1.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중복응답

○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들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손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조부모 가족의 경우 학습관련, 대화 및 의사소통 등 정서적 관계 형성, 식사 및 청소, 빨래 등 가사관련 문제, 적절한 양육자역할 미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조부모들이 손자녀 돌봄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습관련 내용으로, 예컨대 직접적으로는 학교숙제 지도를 할 수가 없으며, 그 외에 학습준비물, 알림장에 대한 이해 등이 부족하여 손자녀의 학습 및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심층인터뷰의 사례에서도 이같은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음. 예컨대 아래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돌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5학년이 되어 어려워서 해줄 수 없다고 하거나, 아예 학교숙제나 공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등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조부모로부터 적절한 학습관련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됨.

“—3학년때까지는 같이 했어요. 저도. 어려워...(중략).—” (친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

“—전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방학숙제 같은 것도 니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해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고, 해갈 놈은 해서 갈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길 원해요.—” (외손자 양육 할아버지)

- 학습관련 지도의 어려움 이외에도 조부모들은 손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는 “애기랑 애기도 하고 마음도 좀 열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손녀 양육할머니).” 라고 토로하기도 함. 즉 조부모와 손자녀는 세대 차이로 인해 상호소

통이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손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여도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기 어렵게되는 문제로 이어짐.

- 한편 식사 및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사 능력의 미흡으로 인해 손자녀 돌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가사담당자로서 경험이 거의 없는 조부의 경우, 손자녀 양육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가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컨대 심층인터뷰 대상 조손가족의 학습지원담당 실무자에 의하면, 조모가 몸이 불편하거나 생존해 계시지 않은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청소, 빨래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학습도우미 이외에 청소 등 가사일까지 해주어야 하는 상황임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음.

“—시골구역에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첫날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개가 9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선생님들이 계셔서 돌봐줘요. 9시에 집에 가는 거죠. 물론 집에 가봤자 할아버지도 안계시니까. 할아버지는 또 할머니한테 가실 때가 많아요. 할머니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자는 날이 많죠. 일찍가도 애는 집에서 놀 수 있는 가족, 피붙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붙들어 두는게 바람직하긴 한데 애가 아침 6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밤 9시에 집에 가면 입은 그대로 나와서 외부에서 하는 활동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엄마 입장이면,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들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집에 데려가서 해라. 이렇게 갔는데 첫날 갔는데 집은 TV에서 보는 집이었어요. 집은 좋거든요. 집도 고쳐놓고 외양도 좋아요. 마당도 넓고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방에. 그래서 침대에서 사니까 매트 깔고, 할아버지랑 자니까, 혼자 잘때가 더 많으니까 바닥은 냉골이죠. 불이 안들어오니깐.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춥잖아요.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첫날은 이런 집도 있구나. 충격을 좀 받고, 저녁밥을 간단히 챙겨먹이고, 그 날은 치우고 왔는지 생각이 잘 안나네요. 대강 치우고 왔을 거예요. 바닥까지 못닦고 왔어요. 쓸어 주기는 했어요. 첫날은, 그리고 왔는데 지금은 갈때마다 저희 아이들 밥 준비하면서 찌개라도 끓이면 한 그릇을 싸서 개 밥 시간이 잘 맞으니까 15분 정도 할애해서 밥도 먹이고 개가 밥을 먹는 시간에 두루두루 대충 치워줘요. 걸레질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고, 활동도 하고. **첫째는 집 환경이 너무 더럽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러시죠. 집이 난장판이라고. 먹은거 그대로. 그래서 그런 가정인 경우는 1주일에 누군가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서 가정을 조금더 사는 환경처럼 치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때는 이렇게 약간만 정리를 해줘도 이것이 집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곰돌이 선생님 T)

- 여기에 더해 조부모의 부모역할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방안 역시 중요함. 예컨대 본 연구진이 인터뷰한 조손가족 가운데 한 사례의 경우에는 손자의 ADHD 증상 치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학습만을 강조하는 애로사항을 표출하기도 함. 이를 보면 조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이나 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손자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음.
-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손자녀에 대한 사랑은 많으나 손자녀 발달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고 자신이 자녀를 양육했던 경험에 근거하고 있어 적절한 양육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따라서 조손가족의 손자녀 돌봄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조부모가 일차적인 손자녀 돌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 교육과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요즘 부모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또 손자녀에 대한 바람이 없으세요. 온전히 사랑 하나 뿐인거예요. 아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아이 상태를 모르고 접근하니까 당연히 교육적인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처법도 모르고, 저도 어저께 수업을 못하고 갔어요. 아이가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제가 말은 애는 ADHD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조절이 안되고 감정통제가 안되니까 컨디션이 저조해서 선생님 가시는게 좋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랑 상담하고 제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ADHD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이가 병원치료,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할머니는 학습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을 꼬박 채워달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책임감에 있어 학습을 놓을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들이 역할에 대한 훈련, 내 새끼들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처럼, 우리 그 아이들은 좀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점도 있구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모 역할교육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좀더 다른 방법으로 내 손자, 손녀들을 대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꿈돌이 선생님 S)

## 2) 조손가족 손자녀의 교육·진학을

- 조손가족 자녀·손자녀의 학교진학 현황을 보기 위해 만연령별 상위학교 비진학율을 비교함.
- 가장 대표성있는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교육수준과 만나이에 대한 정보만 있으므로, 상위학교 진학연령인 7세, 13세, 16세의 비진학율을 비교함. 현행 법령상 학년과 만나이 간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음.
- ※ 의무교육은 만 7세가 속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만 13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만 13세가 되는 해에 중학교에 입학하여 만 16세가 되는 해에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되어 있음(초중등교육법 13조).

〈표 Ⅲ-25〉 학년과 만나이간의 관계

학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만나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 상위학교로의 비진입 아동은 학업중단아동과 진입지체아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곧 학교탈락률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규정된 연령에 상위학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아동에 비해 기회 평등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7세, 13세, 16세 아동의 상위학교 비진입율을 추정해본 결과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손가족 손자녀와 다른 가족형태 자녀간 비진입률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만 7세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비진입 비율은 조손 2.0%, 한부모 1.4%, 양부모 1.0%로 세 집단간 차이는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Ⅲ-26〉 초등학교 진입·비진입아동비율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02(100.0)	886(100.0)	10153(100.0)
무학	2(2.0)	12(1.4)	99(1.0)
초등 재학·수료·중퇴	100(98.0)	874(98.6)	10054(99.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만 13세 아동의 중학교 비진입비율은 조손 4.2%, 한부모 1.3%, 양부모 1.5%로 조손가족이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Ⅲ-27〉 중학교 진입·비진입아동비율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65(100.0)	1576(100.0)	10061(100.0)
무학	1(0.6)	1(0.1)	5(0.0)
초등 재학·수료·중퇴	6(3.6)	19(1.2)	152(1.5)
중등 재학·수료·중퇴	157(95.2)	1552(98.5)	9888(98.3)
중등졸업	0(0.0)	4(0.3)	9(0.1)
고등 재학·수료·중퇴	1(0.6)	0(0.0)	7(0.1)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만 16세 고등학교 비진입비율은 조손 6.1%, 한부모 2.1%, 양부모 1.2%로 조손가족 손자녀가 한부모가족의 약 3배, 양부모가족의 약 5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8〉 고등학교 진입 · 비진입아동비율

(단위: 명, %)

구분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양부모가족
전체	131(100.0)	1153(100.0)	6402(100.0)
초등졸업	0(0.0)	2(0.2)	2(0.0)
중등 재학 · 수료 · 중퇴	6(4.6)	19(1.6)	76(1.2)
중등졸업	2(1.5)	3(0.3)	2(0.0)
고등 재학 · 수료 · 중퇴	123(93.9)	1119(97.1)	6298(98.4)
고등졸업	0(0.0)	10(0.9)	23(0.4)
대학 재학 · 수료 · 중퇴	0(0.0)	0(0.0)	1(0.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2005)

- 조손가족 손자녀의 경우, 한부모나 양부모가족 자녀에 비해 상위학교 비진입률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짐. 한부모 자녀의 경우 상위학교 진입율에서는 양부모가족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반면, 조손가족 손자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학업지도 등 교육적 지원에 있어 조부모의 지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와 구분되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신건강 및 가족 방임실태

- 조손가족 손자녀의 생활세계는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발표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실태조사」<sup>2)</sup> 자료를 활용하여 조손가구 청소년 손자녀의 생활세계를 다른 가구형태에서 생활하는 또래의 청소년들<sup>3)</sup>과 비교해 봄.

2) 2010년 사회조사의 데이터 역시 조손가구의 손자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에 있는 조손가족의 응답 손자녀 수는 30사례가 되지 않아 유의한 분석결과로 보기 어려움.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2010년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

3) 이 후의 분석결과는 5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97,141명의 일반청소년들의 응답을 토대로 한 것임.

- 먼저 가구유형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들 우울, 불안 상태를 보기 위해 문항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0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2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정도는 높지 않은 수준임.
  - 그러나 가구유형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라는 문항에서만 한부모가구 청소년의 동의정도가 가장 높고, 다른 모든 문항에서는 조손가구 청소년의 우울, 불안정도가 가장 높아 조손가구 청소년의 우울, 불안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표 Ⅲ-29〉 문항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정도

(단위: 점)

구분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늘 슬프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하다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자주 무서운 생각이 든다
전체 평균 (N=87545)	0.90	0.57	0.87	0.75	0.78	1.28	1.74	0.73	0.97
가구유형									
조손	<b>1.22</b>	<b>0.78</b>	<b>1.13</b>	<b>1.00</b>	<b>1.02</b>	<b>1.46</b>	<b>1.84</b>	<b>0.88</b>	<b>1.15</b>
한부모	1.17	0.75	1.10	0.97	0.98	1.44	1.97	0.82	1.12
양부모	0.86	0.55	0.83	0.71	0.75	1.26	1.71	0.71	0.95
F	513.348(2) ***	337.245(2) ***	371.585(2) ***	382.214(2) ***	262.649(2) ***	132.510(2) ***	200.802(2) ***	80.844(2) ***	118.594(2) ***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우울, 불안 요인 9문항을 다시 합산하여 가구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36점 만점에 조손가구 청소년은 10.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해 한부모가구 청소년은 10.31점,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8.33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부모가구에 비해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청소년의 우울, 불안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Ⅲ-30〉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우울, 불안 정도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8.61	7.078	
가구유형				
조손	1923	10.48	7.692	418.429(2)***
한부모	10045	10.31	7.578	
양부모	75577	8.33	6.953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36)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다음으로는 청소년 위기요소에 해당하는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대다수 청소년들의 경우 2점 이하로 나타남.
- 그러나 우울, 불안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요인도 모든 문항에서 가구유형별로 차이가 뚜렷함. 즉,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1.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밖의 모든 문항에서 조손가구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한 태도는 그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31〉 문항별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

(단위: 점)

구분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전체 평균 (N=87545)	0.62	0.51	1.21	1.50	1.20	1.32
가구유형						
조손	0.84	0.69	1.39	1.59	1.38	1.50

구분	다른 사람과 치고 받으며 잘 싸운다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답답해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참지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주의집중을 못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한부모	0.76	0.61	1.35	1.63	1.36	1.48
양부모	0.60	0.49	1.19	1.48	1.17	1.29
F	214.327(2)***	136.817(2)***	97.777(2)***	79.815(2)***	159.249(2)***	167.635(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이를 다시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요인 6문항을 합산하여 가구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이 7.38점으로 가장 높고, 한부모가구 청소년은 7.20점,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6.22점의 순임.

〈표 Ⅲ-32〉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6.36	4.510	
가구유형				
조손	1923	7.38	4.876	258.155(2)***
한부모	10045	7.20	4.605	
양부모	75577	6.22	4.473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24)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가구유형별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 또는 조부모의 방임 정도를 살펴본 바, 조손가구의 청소년 방임이 가장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즉, 4문항 모두에서 조손가구 청소년의 방임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가구 청소년의 방임 정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33〉 문항별 청소년 방임 정도

(단위: 점)

구분	부모님은 내가 술이나 담배를 해도 내버려 두신다	부모님은 내가 외박을 해도 어디에서 지냈는지 확인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신다	부모님은 가출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전체평균 (N=87545)	0.15	0.14	0.11	0.12
가구유형				
조손	0.30	0.32	0.23	0.23
한부모	0.25	0.25	0.18	0.19
양부모	0.13	0.12	0.09	0.11
F	383.206(2)***	423.886(2)***	283.543(2)***	205.313(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의 부모관계, 학대, 방임과 관련된 11문항을 합산하여 가구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이 4.84점으로 가장 높음. 이에 비해 한부모가구의 청소년은 4.30점, 양부모가구 청소년 2.87점으로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 청소년은 가정 내 보호와 양육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돌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Ⅲ-34〉 가구유형별 청소년 방임 정도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3.08	5.063	
가구유형				
조손	1923	4.84	6.568	477.013(2)***
한부모	10045	4.30	6.101	
양부모	75577	2.87	4.830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44)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조손가족의 손자녀들은 감정기복이 심하고 분리불안, ADHD 등 다양한 정서적 불안감을 보이기도 함. 이는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실패 등으로 어린나이에 심각한 가족변화를 경험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또한 대단히 중요함.
- 아래는 조손가구 손자녀의 정서적 문제에 관한 심층인터뷰 내용의 일부로, 조부모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들 가정의 손자녀들은 분명 다양한 정서적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에너지의 표출이 낮은 편이죠. 의욕이 낮은 편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만나면 2시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짜증이 난다 그러면 제가 해줘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애기가 마음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주고, 애기를 들어주고, 주변 번두리 애기를 조금 해서 기를 세워준 다음 그 날 해야 할 것을 10이라고 하면 그 날은 2/3도 소화하기도 힘든 날이죠.— 어제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오늘은 니가 기분이 안좋으니까 이것을 안해줬지. 마지막 책을 읽었을때는 한 4줄정도 썼거든요. 잘 했어요. 그랬는데 쓸때 애기가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쪼그만 9살 짜리가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공감대가 있어서. 눈물이 마르다가 다시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그걸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도 대답을 안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뭐라고 말은 안하는데 이게 감정이 왔다갔다 하는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 같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니 엄마다 라고 생각하고 돌봐줬는데 가장 즐거울 때가 언제냐면 동화책을 구연하면서 읽어주거든요. 목소리를 변조를 해서요. 그러면 진짜, 어제는 방귀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웃고 그랬어요. 애기가 어쨌든 1주일에 2번 가서 어쨌든 5번을 웃으면 행복한거 같아요. 저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제가 그러한 상황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꿈돌이 선생님 O)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가 잠깐 와 있는 것인데, 동생은 언니가 있으니까 별반 문제가 없는 데 언니는 엄마가 안보이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개가. 내가 어떻게 그 당시는 따뜻하게 보듬어줘서 그 당시는 어떻게 되도 그게 영구히 치료가 안될거 같아요. 전문적인 상담 프로그램과 좀 연계를 해줘서 개의 정서 상태라든지 엄마나 선생님이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애를 위해서 어떤게 최선의 노력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해줄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막 공부를 집중을 못하고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가도 엄마, 엄마하고 따라다니고 엄마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1학년인데 학교를 가서도 엄마가 어디가고 없을거라는 생각에 자꾸만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하고,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요 조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조퇴를 한 적이 여러번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애가 상담쪽으로 받아서 진단을 좀 해봐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꿈돌이 선생님 T)

#### 4)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생활 및 유해환경 접촉 현황

- 2009년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조손가족의 청소년 손자녀의 학교생활은 양부모가족 청소년 자녀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표 Ⅲ-35〉 문항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단위: 점)

구분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다	나는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	나는 좋아하는 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다	나는 학교가 싫다	중중 수업을 빼먹는다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전체평균 (N=87545)	1.63	0.66	0.75	0.32	1.03	0.14	0.14
가구유형							
조손	2.02	0.81	0.88	0.47	1.24	0.30	0.34
한부모	2.01	0.84	0.92	0.43	1.29	0.28	0.34
양부모	1.57	0.64	0.72	0.30	0.99	0.12	0.10
F	694.828(2) ***	230.067(2) ***	175.463(2) ***	203.134(2) ***	299.561(2) ***	500.405(2) ***	1102.441(2) ***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7개 문항을 합산하여 가구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한부모가구 청소년 6.10점, 조손가구 6.06점, 양부모가구 청소년 4.45점의 순으로 나타나 조손가구나 한부모가구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나 적응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음.

〈표 Ⅲ-36〉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실태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4.67	4.076	
가구유형				
조손	1923	6.06	4.653	858.060(2)***
한부모	10045	6.10	4.574	
양부모	75577	4.45	3.94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28)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한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 친구들은 건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가구유형별로는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남.

〈표 Ⅲ-37〉 문항별 청소년의 반사회적 친구와의 접촉빈도

(단위: 점)

구분	가까운 친구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경찰이나 파출소에 잡혀간 친구가 있다	가까운 친구 중에 폭력서클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가 있다
전체평균(N=87545)	0.40	0.37	0.27	0.28
가구유형				
조손	0.59	0.47	0.38	0.30
한부모	0.57	0.48	0.41	0.33
양부모	0.38	0.35	0.25	0.28
F	238.954(2)***	122.635(2)***	231.546(2)***	22.972(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반사회적 친구와의 접촉빈도를 묻는 관련 4개 문항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별로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1.80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조손가구는 1.74점,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1.2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38〉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반사회적 친구와의 접촉빈도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1.32	2.466	
가구유형				
조손	1923	1.74	2.848	250.909(2)***
한부모	10045	1.80	2.948	
양부모	75577	1.25	2.376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16)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위기로인으로 작용하는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본 결과,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노출된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남.
- 예컨대 하루에 3시간 이상 게임을 한 경험은 양부모가구 청소년이 0.9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조손가구와 한부모가구는 1.34점으로 동일한 수준임.

〈표 Ⅲ-39〉 문항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

(단위: 점)

구분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타인(부모, 교사 등)과 심한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게임 등) 사용으로 인해 계획한 일들을 제대로 못한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한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게임(인터넷)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을 못한 적(결석, 지각, 학원가기, 친구만나기 등)이 있다
전체 평균 (N=87545)	0.21	0.63	1.00	0.20
가구유형				
조손	0.28	0.60	1.34	0.26
한부모	0.27	0.70	1.34	0.26
양부모	0.21	0.62	0.95	0.19
F	63.178(2)***	27.810(2)***	498.687(2)***	66.480(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 인터넷 문제 4개 문항을 합산하여 16점 만점으로 가구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2.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구는 2.48점,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1.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이로써 한부모가구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Ⅲ-40〉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2.05	2.670	
가구유형				
조손	1923	2.48	3.006	263.627(2)***
한부모	10045	2.58	2.997	
양부모	75577	1.97	2.605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16)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촉빈도를 살펴본 결과, 이 역시 가구유형별로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청소년이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복용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Ⅲ-41>으로,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술, 담배, 가스, 본드, 마약류 사용 경험에서 모두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 조손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술, 담배 경험에서는 동일한 수준임. 이에 비해 가스, 본드, 마약류 복용 경험은 조손가구의 청소년들이 한부모가구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표 Ⅲ-41〉 문항별 청소년의 유해약물경험

(단위: 점)

구분	지난 한달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한달 동안 가스, 본드, 마약류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전체평균(N=87545)	0.18	0.18	0.02
가구유형			
조손	0.32	0.39	0.04
한부모	0.32	0.39	0.03
양부모	0.16	0.14	0.02
F	396.984(2)***	572.316(2)***	10.213(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 유해약물 복용과 관련된 3개 문항을 합산하여 12점 만점으로 가구유형별 평균을 살펴본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이 0.76점, 한부모가구 청소년은 0.75점,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0.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Ⅲ-42〉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유해약물경험

(단위: 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전체	87545	0.39	1.240	
가구유형				600.324(2)***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F)
조손	1923	0.76	1.790	
한부모	10045	0.75	1.739	
양부모	75577	0.33	1.129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12)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경험을 가구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신체적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 강탈 등의 내용으로 살펴본 결과가 <표 III-43>임.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조손가구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III-43> 문항별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단위: 점)

구분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신체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로부터 심한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나 선배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적이 있다
전체평균 (N=87545)	0.08	0.11	0.13	0.16	0.10
가구유형					
조손	0.13	0.18	0.22	0.27	0.13
한부모	0.10	0.13	0.15	0.20	0.13
양부모	0.08	0.10	0.12	0.16	0.09
F	29.933(2)***	42.397(2)***	40.863(2)***	49.583(2)***	39.673(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역시 양부모가구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낮으며, 신체적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에서는 조손가구 청소년, 도둑질한 경험은 조손가구와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동일하게, 그러나 강탈경험은 한부모가구 청소년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Ⅲ-44〉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단위: 점)

구분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폭행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를 괴롭힌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 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전체 평균 (N=87545)	0.10	0.13	0.16	0.17	0.07	0.04
가구유형						
조손	0.18	0.17	0.24	0.24	0.11	0.07
한부모	0.14	0.14	0.18	0.22	0.11	0.08
양부모	0.10	0.13	0.15	0.16	0.06	0.03
F	74.302(2)***	8.332(2)***	36.604(2)***	50.110(2)***	74.370(2)***	98.781(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들의 자살경험을 살펴보면, 3개 문항 모두에서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조손가구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5〉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자살충동경험

(단위: 점)

구분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 평균(N=87545)	0.50	0.16	0.09
가구유형			
조손	0.62	0.23	0.13

구분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한부모	0.65	0.25	0.15
양부모	0.47	0.15	0.08
F	186.535(2)***	167.624(2)***	160.123(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들의 가출경험 역시 조손가구와 한부모가구 청소년의 평균은 0.14점으로 동일하지만,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0.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표 Ⅲ-46〉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가출경험

(단위: 점)

구분	지난 1년 동안 가출 한 경험이 있다.
전체평균(N=87545)	0.06
가구유형	
조손	0.14
한부모	0.14
양부모	0.05
F	341.328(2)***

주1)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정도가 높음(0: 전혀 없다, 4: 거의 매일)

주2) \*  $p < .05$ , \*\*  $p < .01$ , \*\*\*  $p < .001$

자료: 한국청소년상담원, 전국청소년위기상황실태조사(2010)

- 청소년이 현재 가출한 상태인지 학업중단 상태인지를 질문한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의 경우 1.4%가 가출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1.3%, 양부모가구 청소년이 0.3%로 나타남. 학업중단 상태 역시 조손가구 청소년이 4.0%, 한부모가구 청소년이 2.9%, 양부모가구 청소년은 0.5%로 나타나 일탈비율 역시 조손가족의 청소년 집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Ⅲ-47〉 가구유형별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상태

(단위: 명, %)

구분	가출		합계	$\chi^2(df)$	학업중단		합계	$\chi^2(df)$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전체	87194(99.6)	351(0.4)	87545(100.0)		86826(99.2)	719(0.8)	87545(100.0)	
가구유형								
조손	1896(98.6)	27(1.4)	1923(100.0)	304.381(2)	1847(96.0)	76(4.0)	1923(100.0)	862.332(2)
한부모	9912(98.7)	133(1.3)	10045(100.0)	***	9756(97.1)	288(2.9)	10044(100.0)	***
양부모	75386(99.7)	191(0.3)	75577(100.0)		75223(99.5)	355(0.5)	75578(100.0)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이같은 유해환경에의 노출은 결과적으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심각한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함.

- 실제로 순천시 조손가족학습도우미 대상 조손가족의 손자녀들 역시 기초학력 미달상태인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동기도 부족하고, 장기간 누적되어 온 학습부진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저희가 교재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손가정 아이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형편이어서 그 나이에 기초학력이 안돼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6학년인데 6학년이 아니라 더 낮은 수준으로.—” (꿈돌이 선생님 H)

“—저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7살 짜리 아이를 맡고 있는데 개네들은 처음에 교재 수준을 정하려고 할머니랑 통화했을 때 여쭙봤을때 웬만한 글은 읽을 줄 알고 셈도 할 줄 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교재를 사면 되겠구나 해서 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글을 못읽는 거예요. 글을 못읽는 것을 떠나서 애가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가 없고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아이들을 돌보는 조부모님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애긴가 하면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다 다르거든요. case by case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것 처럼 아이들의 특성을 알고 사실은 기초학력 부진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의욕이 다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저희가, 교사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시에서 저희를 어느 기준에서 보고 채용하셨지만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아이들의 심리를 읽어내고 아이들이 학습에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끌어내

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돌이 선생님 I)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미달인 아이들이 거의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꿈돌이 선생님 J)

## 4. 소결

- 전국 가구 가운데 조손가구의 비중은 약 0.4%에 해당하며, 전국에 약 6만 3천여 가구의 조손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의 가구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가족유형별 양육 아동수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손자녀수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적음. 예컨대 양부모가족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로 71.1%이며, 그 가운데 2명인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61.4%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2명 이상인 경우가 55.8%로 1명인 경우(44.2%)보다 더 많음. 반대로 조손가족에서는 손자녀가 1명인 경우가 60.7%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함.
  - 아동의 연령을 가구형태별로 비교해보면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이 양 부모가족에 비해 아동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즉,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13세 아동이 가장 많은 역V자형의 가파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양부모가족의 경우 평탄한 모양의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배우자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과반수 이상인 57.9%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조손가족의 조부모 연령은 60대가 53.7%, 70대가 38.6%였으며, 80대 이상인 경우도 4.6%로 나타남.
  - 부모 및 조부모 등 가구주 부부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의 조부모는 연령의 특징상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인구주택 총조사 재분석 결과 역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음. 즉 조손가족 조부모의 약 3명 가운데 한 명은 장애가 있고, 약 5명 중



한 명은 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손가족의 조부모들 스스로가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달함.
- 이러한 사실은 곧 조손가구 조부모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기간 동안 손자녀 돌봄과 가사를 대신해줄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임.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조부모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73.5%가 미취업 상태일 뿐만 아니라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대다수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취업한 조부모들의 대다수인 68.8%는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문가, 기술공, 사무·서비스·판매직 등 일정 이상의 숙련도가 필요한 직업의 종사비율은 매우 낮아 농림어업 외에 단순노무비율은 12.4%를 차지함. 결국 이러한 취업형태는 조부모의 취업상태가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실제로 조손가족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으며, 소득구조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조손가족은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비중있는 소득 원천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1차 소득의 비중이 매우 낮음.

- 조손가족의 소득분포를 보면, 공적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과반수이상인 65%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나타나 한부모가족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며, 공적이전의 효과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의 경우 그 격차는 다소 줄어들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조손가족의 가구원수를 고려한 소득 10분위 상에서의 분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명확하게 드러남.

○ 조손가족의 경우 미취학 손자녀 돌봄은 주로 조부모에 의해 전담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주로 부모가 돌보지만 때로 조부모가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는 한부모나 양부모가족에 비해 보육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특히 조손가족 초등학생 손자녀의 방과후 보육 역시 조부모에 절대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다른 가족의 아동들이 주로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들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손자녀 돌봄과 관련하여 조부모 가족의 경우 학습관련, 대화 및 의사소통 등 정서적 관계 형성, 식사 및 청소, 빨래 등 가사 관련 문제, 적절한 양육자 역할 미흡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교진학 현황을 보기 위해 만연령별 상위학교 비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조손가족 손자녀의 상위학교 비진입 아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법령상 규정된 연령에 상위학교 진입을 하지 못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아동에 비해 기회평등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조손가족 아동·청소년의 경우 한부모나 양부모가족 아동에 비해 상위학교 비진입률이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커짐. 이는 학업지도 등 교육지원에 있어 조부모의 지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조손가족 손자녀의 생활세계는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발표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분석한 결과, 조손가구 청소년의 우울, 불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위기요소에 해당하는 공격성, 충동성, 부주의 정도와 부모 및 조부모의 방임정도 역시 조손가족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한편,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 친구들은 건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가구유형별로는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컨대 조손가족 청소년들의 경우 반사회적 친구가

있다는 응답과 인터넷 노출정도 등 유해환경에의 접촉 빈도가 여타 가구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임.

-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신체적 폭행, 따돌림, 괴롭힘, 언어폭력, 돈이나 물건 강탈 등은 물론 가출경험에서도 조손가구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IV

---

### 조손가족지원정책의 특징 및 제언

---

1. 조손가족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및 현황	73
2. 조손가족지원정책의 개선방안	87
3. 소결	98



## 1. 조손가족관련 지원정책의 특징 및 현황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손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소득 및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근거한 지원 정책이 있음.
  -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조손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체계는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임.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일부의 저소득층 조손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원규모가 자녀 또는 손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제한적임.
  - 이와 함께 조손가족과 관련된 지원체계는 조부모가 수혜자인 노인지원정책, 손자녀가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 아동지원정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조손가족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노인과 손자녀가 각기 혹은 특정한 가족형태로 인정하여 이들을 함께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 1) 노인 관련 지원 정책

#### (1) 기초노령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 도입한 공적 부조식 연금으로, 1991년 도입된 노령수당제도를 기초로 하여 1998년부터 경로연금제도로 변경되었다가 2008년부터 시행됨.
  - 이 제도는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되며,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5%를 기준으로 책정됨.

〈표 IV-1〉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 2011년 노인단독 740,000원, 노인부부 1,184,000원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기본재산가액-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지원액(2011.1~2011.3 적용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이상~68만원미만	68만원이상~70만원미만	70만원이상~72만원미만	72만원이상~7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 미만	110.4만원이상~112.4만원미만	112.4만원이상~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116.4만원미만	116.4만원이상~118.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 미만	106.4만원이상~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118.4만원이하
연금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자료: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1) pp.xxii~xxiii.

-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조부모가 65세 미만인 경우 혜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급 액수도 1인당 20,000~90,000원 수준으로 손자녀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또한 이것이 가족단위의 지원체계가 아닌 노인 개인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

으로 인한 경제적, 신체·정서적 부담을 지원하지는 못함(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2) 노인복지서비스

- 지역사회기관 및 노인복지관에서의 정서서비스 및 교육문화서비스, 가족단위서비스(예: 가족교육, 가족역할훈련, 상담서비스 등)를 이용할 수 있으나(이화영, 2007), 조손가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제한적임.
- 그러나 이들 기관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기술을 함양하여 손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지지집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지지를 발견하여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음.

##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함.
- 이는 직접적으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조손가족의 조부모지원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됨.

〈표 IV-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li> <li>※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li> <li>▪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li> <li>② 건강상태 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요양서비스 필요)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li> </ul> </li> <li>※ 대상자 선정 시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족 유무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li> </ul> |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급 외 A	기초생활수급자(1순위)
	차상위(2순위)
	차상위 초과(3순위)
등급 외 B	기초생활수급자(4순위)
	차상위(5순위)
	차상위 초과(6순위)

▪ 지원내용:

- ① 신변·활동지원: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② 가사·일상생활지원: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③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자료: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1) pp.104~123.

## 2) 아동지원정책

### (1) 대리양육가정위탁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조 등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가정위탁(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 가운데 대리양육 가정위탁이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 의한 손자녀 양육이므로 조손가족이라고 볼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대리양육 가정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며, 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지원하고 있음(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표 Ⅳ-3〉 대리양육가정위탁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위탁가정 선정기준:
  - ① 위탁아동과 동거할 것
  - ② 위탁아동을 돌봄에 현저한 장애 및 건강상의 질병이 없을 것
  -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콜·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④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⑤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 지원내용:
  - ①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상(지방이양)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③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험료-1인당 년 7만원 이내,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④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지원(국토해양부)

자료: 「2011년 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52~58.

- 그러나 형태상 대리양육 가정위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 대리양육가정으로서는 기능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조손가족도 있음.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할 지역이 광범위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질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강기정, 2008).

## (2) 드림스타트

-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0세~만12세 저소득 아동과 가정(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120% 가정)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로 빈곤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아동발달에 필요한 필수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음. 이와 함께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맞춘 선택적 서비스를 제공함.

#### 〈표 IV-4〉 드림스타트

- 지원대상: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
  - ※ 기초수급가정 및 차상위층 가정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함
  -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아동, 결손가정, 성폭행 피해아동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① 기본서비스: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② 필수서비스: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산전산후관리, 기초학습지원, 사회정서지원, 부모 교육서비스
  - ③ 선택서비스: 건강관리, 치료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 양육지원 등

자료: 「201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12~13, pp.38~41.

- 저소득 조손가족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아동의 보건·복지·교육 및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캠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0세(3개월 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대상)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조손가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표 Ⅳ-5〉 아이돌보미사업

- 지원대상:
  - ① 0세(3개월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②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③ 저소득 취업 한부모
  - ④ 그 외 취업 한부모가정(모자, 부자, 조손, 미혼모)
  - ⑤ 맞벌이 가정
  - ⑥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 중에서,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양육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
    - 장애부모 가정
  - ⑦ 그 외 가정
- 지원내용:
  - ① 양육돌보미
  - ② 학습돌보미
  - ③ 기관파견돌보미
  - ④ 법정전염병 간염 아동 지원 서비스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이용요금 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이용요금 20% 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다형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5,000원	0원	5,000원

자료: 「2011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1) pp.12~13, pp.22~23, p.29.

#### (4)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을 제공함.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이용 아동에게 생활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조손가족 아동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 기관임(장승욱·권은정, 2010)

### 3) 빈곤가족지원정책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①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보건복지부, 2005)’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 등의 항목이 있음.
  -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조손가족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육아급여, 의료급여,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등이 지원됨.

〈표 Ⅳ-6〉 기초생활보장 개요: 생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li> <li>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인정액 기준(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li> </ul> </li> </ul>							
〈2011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11(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2010(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119,607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6,291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 ②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판정  
(부양능력없음: 수급자선정/ 부양능력미약: 부양비 부과/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제외)
- 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내용
  - ①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 ②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③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자료: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1) p.5, p.25.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비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빈곤가구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설계된 것으로, 단기간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손가족의 특성상 이들 가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움(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② 의료서비스 지원

- 조손가족의 해당 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일 경우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 ③ 디딤씨앗통장(CDA)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의 일환으로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 대국민 사업명칭인 “디딤씨앗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
- 조부모와 살고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에 의한 가정위탁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아동이 지자체가 보호관리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인 경우 디딤씨앗통장 대상에 포함.

〈표 IV-7〉 디딤씨앗통장(CDA)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 정부매칭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지만 본인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저축가능
- 매칭 및 적립:
  - ① 기본 매칭적립: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 ②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 없음

자료: 「2011년 아동분야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10) pp.201~202.

## (2) 한부모가족지원정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과 그를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조손가족임(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족지원은 ①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한 양육비·교육비 지원과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③ 가족역량강화 지원 서비스(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등)가 있음.
- 그러나 조손가족의 경우 양육 책임자인 조부모의 대부분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고, 향후 자활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보호를 전제로 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또한 부모의 유기나 실종, 이혼 등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손자녀들을 조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만큼 손자녀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역시 매우 중요.

①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대한 양육비·교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12세 미만, 월 5만원)와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취학시 22세)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00~130%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됨.



〈표 IV-8〉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 18세미만(취학시 22세) 아동을 양육하는 최저생계비 100~130% 한부모가구-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선정기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세대)로써 2011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 시에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보호결정)함
  - ① 보호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2011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11(원/월)	1,178,879	1,525,057	1,871,237	2,217,415	2,563,594

※ 7인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 1인 증가시 소득인정액 346,179원씩 증가(7인가구 2,909,773원)

- ② 조손가구 중 실직 등 경제적 사유에 의한 조손가구의 경우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소득 인정액(소득 및 재산 모두 합산)을 먼저 파악한 후 13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조부 또는 조모의 소득평가액만을 파악(재산을 고려하지 않음)하여 130% 이상의 경우에 선정
  - ③ 부양의무자 기준 선정하지 않지만, 조손가구 중 실직 등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 확인
  - ④ 조부와 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 또는 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 이상이면 보호대상임
- 지원내용:
- ①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비(월 5만원)
  - ②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자료: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1) pp.21~48.

## ②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한부모가족세대(조손가족세대 포함)로서 직계비속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이거나, 21세 이상인 자가 있더라도 군복무 또는 학생인 세대에 대해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함.

〈표 Ⅳ-9〉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경감기준

구분	경감적용		적용요건			구비서류
	등급	비율	소득금액	과표재산	장애등급	
한부모가족	1	30	36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	재학증명서 등
	2	20		6,000만원초과~9,000만원이하		
	3	10		9,000만원초과~13,500만원이하		

자료: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1) p.301.

### ③ 가족역량강화 지원

#### 가.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 2011년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시범운영되기 시작함.
  -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 학령)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를 대상으로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경감 및 건강지원과 손자녀의 학습부진, 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년 부산, 인천, 충남, 전북에서 조손가족통합지원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음.

〈표 IV-10〉 조손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 사업대상: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 배우자와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 학령)의 손자녀로 이루어진 조손가구
  -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읍·면·동사무소장), 학교장, 사업수행기관장 등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5세 이상 조손가구도 가능
  - ※ 손자녀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의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 ① 1순위-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
  - ② 2순위-최저생계비 131~150% 이하 조손가구
  - ③ 3순위: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사업수행기관장 등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손가구
- 사업내용:
  - ① 아동학습지원
  - ② 생활가사 돌봄 지원
  - ③ 문화 프로그램
  - ④ 심리건강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손가족 장학사업(연계·지원사업)

자료: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1) pp.342~344.

- 이들 사업은 손자녀 학습 및 활동 멘토링, 집단상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 및 상담사업의 경우 아직 양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손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 대한 교육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내용면에서 제한적임. 또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캠프, 단합행사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시가 필요함.
- 더욱이 인력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보다 많은 조손가족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임.

#### 나.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이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하여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 및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표 IV-11〉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부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li> <li>※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하되, 승소금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li> <li>▪ 지원대상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자녀양육비 청구소송</li> <li>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li> <li>③ 자녀양육비 이행확보</li> </ul> </li> <li>▪ 지원내용: 1인당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li> </ul>
---

자료: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1) pp.345~346.

- 이 외에도 조손가족은 위기가정 서비스, 빈곤가정 위기지원 사업, 결식 아동급식지원 사업 등 부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 조손가족지원정책의 개선방안

### 1) 현 조손가족지원 정책의 문제점

- 한국의 경우 혈연중심적인 가족주의 성향으로 부모가 자녀양육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생존해 있는 조부모들은 손자녀돌봄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음(이정화·한경혜, 2008).
  - 그 결과 다양한 이유로 형성된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분명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조손가족이 손자녀의 양육으로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경감 또는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들

가족기능을 강화 혹은 보완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현행 조손가족 관련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 역시 저소득 노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지원이라는 점에서 조손가족 구성원이 체감하는 정책의 효과성은 다소 미흡.

○ 조손가족을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가족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임.

- 그러나 본 지원정책의 주된 초점은 한부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지원에 관한 것으로, 핵심적인 지원은 최소한의 양육비·교육비 지원과 창업 자금지원, 모·부자 가족의 주거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이혼이나 미혼한부모들과는 달리 근로능력이나 손자녀 돌봄 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노인들의 돌봄노동을 고려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뿐만 아니라 노인에 의해 돌봐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손가족 손자녀들이 경험하는 조부모와의 소통문제나 부모와의 갑작스런 별리 혹은 해체로 인한 정서적 혼란과 조부모들의 미숙한 학업지원에 의한 학업부진의 문제는 전적으로 조손가족의 몫으로 남겨짐.

○ 이런 점에서 향후에는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향후 기존의 아동, 노인정책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구직욕구가 있는 조손가족의 조부모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함. 이때 일자리사업은 유형별로 1순위 선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큰 조손가족의 조부모가 사업에 지원할 경우 우선적인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함 (서홍란·김양호, 2009).

- 또한 조손가족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이용절차를 제공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즉 다양한 정책이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조손가족의 조부모들은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떻게 지원받는 것인지에 대한 원스톱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는 조부모들의 경우 다른 성인세대들에 비해 정보접근력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염동훈·김혜영·안치민, 2007).

## 2) 효과적인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제언

- 현재 노인과 아동으로 이원화되어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손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요한 정책기조를 점검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각각의 대상별, 가족형태별로 제공되고 있는 조손가족관련 지원방식을 통합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욕구에 부합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조손가족의 조부모와 손자녀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가족단위의 서비스(예: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 훈련 등의 가족관계 증진사업, 급식서비스, 경제적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보호사업)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을 근거로 제공될 수 있음.
- 이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조손가족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 조손가족에 대한 적실한 지원체계를 구비하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는 방안과, 조손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별도 법안마련의 배경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별도의 법안마련을 위한 몇가지 선행과제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1) 조손가족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나 한부모 유형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조손가족의 노인 및 손자녀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규모의 확대 및 다양한 지원서비스 확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이 필요.
  - 향후 한부모가족지원사업내용의 주요한 개선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① 양육비 지원액의 현실화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대상은 최저생계비 100~130% 수준에 있는 한부모들로서 이들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자녀양육비는 월 5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조손가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의 현실화는 매우 시급함.
    - ※ 2011년 현재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월 15만원 지급
  - 2010년 현재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조손가족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복지급여를 실시해야 함.

〈표 Ⅳ-12〉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의 내용

-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2>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삭제<2011.4.12>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4.12>

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추가 생계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2010년 최저생계비계측조사 연구(김미곤외, 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자가구 및 부자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제안한 바 있음.

〈표 Ⅳ-13〉 한부모가구 최저생계비 추가비용(3인가구 기준)

(단위: 원)

분류	내용	모자가구	부자가구
식료품비	외식비 및 배달식비 추가, 가정식비용 절감분 삭감	41,091	40,326
피복신발비	세탁료 및 수선비 추가, 모자가구는 외출복 추가	3,305	1,351
가구집기	보안 위한 보조키 비용 추가	887	887
교육비	방과후학교 및 보습학원 비용 추가, 가정학습지 절감분 삭감	137,121	137,121
교통통신비	아동보호·양육 위한 택시 및 핸드폰비 추가	15,848	15,848
계		198,252	195,543

자료: 김미곤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 조손가족도 성인가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부모가구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한부모가구 추가생계비에 해당하는 약 20만원 수준이 공통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육체적인 한계와 이용가능한 보육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들은 신체적인 한계에 달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5세 미만 아동이 있는 조손가구에게는 아동돌봄 및 가사를 둘러싼 신체적·시간적인 도움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사도우미 활용에 준하는 비용을 추가양육비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가사도우미 활용비용은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에 기반하여 추정하였으며,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이 되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추정된 2010년 가사도우미 활용비용은 48,545원임.

〈표 IV-14〉 가사도우미 활용비용 추정

	산출내용	가사도우미 활용비용 추정치
2005년 (A)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 중소도시 중위값 가사도우미 임료 월평균 소비자가격 (파출부가정일 식사제외, 1일)	35,000
2010년 (B)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가사서비스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 (A × 138.7%)	48,545

\*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는 2009년 2월 이후 발표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만 공표. 이에 따라 2005년 1월의 「물가조사」에 나타난 ‘가사도우미 임료’를 2010년 ‘가사서비스’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

\* 최저생계비 산출시 기준이 되는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함. 「소비자물가조사 가격월보」의 29개 중소도시의 중위값 선정.

-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사도우미 월 1회의 비용을 가정할 경우 50,000원, 월 2회의 비용을 가정할 경우 약 100,000원의 수당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함.

## ② 조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역시 의료비 지원체계에 편입되어 있으나, 세대구성에서의 특성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조손가족의 경우,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여느 한부모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돌봄으로 인한 가사 및 돌봄노동, 나아가 부양을 위한 직·간접적 유급노동의 부담을 안고 있어 유병률은 동일세대 노인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경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현재 의료비 지원방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조손가족 조부모의 건강권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이 되는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다른 한부모 자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조부모들의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 노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호 1종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③ 조손가족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운영

- 조부모에 대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기관을 전국 권역별로 묶어 지정하여 조손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실시가 필요함.
  - 조손가족은 수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이 쉽지 않음. 따라서 가족지원기관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성의 인프라에 조손가족지원을 담당하는 담당인력을 배치(담당인력 배치 및 기본사업을 위한 사업비 예산 소요).
  - 조손가족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정보 및 상담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은 물론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노인복지회관, 손자녀 학업관련 학교담당자, 의료기관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 특히 손자녀의 학업지원 및 정서적 안정감, 자신감 등의 회복을 위해 정기적인 돌보미 파견(기초 학업지도 및 조연자 역할).
  - 파견된 돌보미들은 정기적으로 손자녀의 학업진척 사항 및 아동 및

청소년기 발달과정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지원프로그램 요청 등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가족봉사단, 가족캠프 사업 등과 연계하여 조손가족 멘토링, 조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캠프 혹은 다양한 가족형태로 생활하는 또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조손가족 손자녀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의 정례적 실시가 필요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조손가족 지원방안의 운용이 필요함.
  - 전남 순천시의 ‘꿈돌이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손가족 손자녀의 학습도우미 파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원 가정의 수가 많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마감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이에 조손가족지원을 위한 ‘특별 재정’확보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서 한부모지원사업에서는 제공하지 않은 조손가족에 대한 부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2) 조손가족을 위한 특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조손가족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손가족의 특성에 맞는 부가적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일부에서는 손자녀를 돌보는 노인가구주들의 특성과 부모와의 단절을 경험한 상황에서 연로한 조부모와 생활하는 손자녀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의 한 예로 2011년 2월 14일 이정선의원 대표 발의된 조손가족지원법(안)이 있음.
- 이정선 의원안에 의하면, 조손가족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손가족을 1~3계층으로 구분하되, 1층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2층은 최저생계비 130%-150%이하, 3층은 최저생계비 150% 초과로 정의
- 1~3층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에게는 가족수당 5만원, 아동학습수당(아동 1명당 1층 10만원, 2층 5만원) 지급과 함께 생계비(1층 10만원, 2층 5만원)를 지급하는 것임.

○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 역시 적지 않음.

- 주요 반대사유로는,

- 1) 요보호아동 발생 시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근거 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조부모에게 위탁, 10년 10,864명)을 원하는 연고자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3항에 의거 일시적으로 아동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동법 제 28조의2에 의하면 전국에 18개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설치(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부모 교육 및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서비스 제공)되어 있음. 그러나 동일한 조손가정에 대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예산 낭비 및 사례관리의 분산화로 인한 종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의 가정위탁체계를 확대하여 지원을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2) 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개념으로써 4인가구를 표준으로 측정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표준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구특성에 따라(한 부모, 장애인가정) 추가지출 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조손가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발의안과 같이 다른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경우 최저생계비 및 소득인정액 기준의 변동에 따라 이 법에 의한 대상자에도 변동이 생겨 제도의 예

측가능성 및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판이 없지 않음.

-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점은 본 연구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조손가족의 6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해 있으며, 19%가 최저생계비이상 130%이하의 구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정선 의원(안)에 의하면, 1-3층의 구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 거의 모든 조손가족이 지원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음.

- 즉, 가구 수를 추계했을 때, 전국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조손가구는 31,140가구, 최저생계비이상 130%이하의 조손가구는 8,937가구로 추정되었음(단 54개의 사례로 추정한 값이므로 일반화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130% 이상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조손가구는 16.5%에 불과함.

- 조손가족의 소득분포와 실제 수급자수를 비교하여 현재 지원받고 있지는 않으나 지원이 확대될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비빈곤 잠재 수급자 수를 추정하였음.
- 여러 가지 소득개념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한부모가족지원 기준 소득’을 활용함. 시장소득과 공적이전 중 사회보험만을 합산한 값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소득인정액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 비교대상 소득으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사업상 기준인 최저생계비 100%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상 기준인 130%를 설정하였으며<sup>4)</sup>, 가구원 수별로 각기 비교하여 산정함. 기준년도는 조사년도인 2009임.

〈표 IV-15〉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소득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100% <sup>1)</sup>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최저생계비 130% <sup>2)</sup>	-	1,086,490	1,405,540	1,724,590	2,043,640	2,362,690

1) 보건복지가족부(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보건복지가족부(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추정결과와 다음과 같음.

- 조손가족의 65%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구간에 속해 있으며, 19%가 최저생계비이상 130%이하의 구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수를 추계했을 때, 전국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조손가구는 31,140 가구, 최저생계비이상 130%이하의 조손가구는 8,937가구로 추정되었음(단 54개의 사례로 추정한 값이므로 일반화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표 IV-16〉 소득수준별 가구수 추정

(단위: 가구, %)

구분		조손	한부모	양부모
표본 가중치 적용	전체	54(100.0)	466(100.0)	5234(100.0)
	100% 미만	35(64.8)	135(29.0)	202(3.9)
	100%이상-130% 미만	10(18.5)	57(12.2)	195(3.7)
	130% 이상	9(16.7)	274(58.8)	4837(92.4)
모수 가중치 적용	전체	48018(100.0)	414852(100.0)	4660357(100.0)
	100% 미만	31140(64.9)	120100(29.0)	179725(3.9)
	100%이상-130% 미만	8937(18.6)	50558(12.2)	173594(3.7)
	130% 이상	7941(16.5)	244194(58.9)	4307038(92.4)

자료: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실제 수급가구 수에 비추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의 잠재적 수급가구 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의 경우 수급율 9%,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수급가구 비율이 4%로 나타나고 있음. 이 비율은 제도접 근성, 추정오차, 년도 이월효과 등이 모두 포함된 비율로 실제 수급률(take-up rate)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추정상의 proxy에 해당함.
  - 130%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4%의 수급가구 비율이 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320가구가 잠재적 수급가구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표 IV-17〉 소득수준별 수급가구수 추정

(단위: 가구, %)

구분	대상가구(A)	수급가구(B)	수급가구 비율(A/B)
100% 미만	31140 <sup>1)</sup>	2779 <sup>2)</sup>	8.9%
100% 이상-130% 미만	8937 <sup>1)</sup>	360 <sup>2)</sup>	4.0%
130% 이상	7941 <sup>1)</sup>	320 <sup>3)</sup>	4.0% <sup>3)</sup>

1) 「2009 국민생활실태조사」(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여성가족부 내부집계자료(2010. 12. 31)

3) 100-130% 구간과 수급율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수급가구 추정

- 4) 국회에 상정된 「조손가족지원법안」에서는 수급대상자를 130%와 150%를 기준으로 세 층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비빈곤층 중에서 150% 수준 또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한 추정도 시도하였음. 그러나 비빈곤층의 조손가족 사례수가 9명에 그쳐 이들을 세분화할 경우 일반화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본 연구에서는 비빈곤층 조손가족 잠재수급자수 추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향후 정밀한 조손가족 소득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조손가족의 욕구에 부합되는 특별 조손가족지원 체계 마련은 무엇보다 조손가족에 대한 정확한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이들의 소득 및 소비구조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에 의해 지원받는 조손가구의 수는 극히 적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원체계마련이 고민되어야 할 것임.
- 실제 수급가구 수에 비추어 최저생계비 130% 이상의 잠재적 수급가구 수를 추정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가구의 경우 수급률 9%, 한부모가족지원 대상가구의 경우 수급가구 비율 4%에 불과
- 따라서 현재와 같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보다는 정확한 제도설계 후에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함.
  - 본 연구는 데이터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적인 분석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음. 2011년 하반기 이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활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손가구의 규모와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손가족 손자녀들에 관한 정보는 대단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지출비용 등을 정확히 집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요구됨.
  - 이같은 작업에 근거하여 조손가족에 적합한 소득인정액의 계측과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정확한 규모 추계작업에 기초한 독립지원체계 방안 마련

### 3. 소결

-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보다도 소득수준이 낮으며, 소득구조도 큰 차이가 있음은 앞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음.

- 더욱이 이들 가족 조부모들 역시 열악한 건강상태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녀들 역시 건강하지 않은 학습환경에 처해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체계는 물론 조부모나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지원서비스 체계는 전혀 통합적이지 않은 현실임.
- 조손가족은 소득 및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조손가족의 구성원인 노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조손가족지원정책은 주로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조손가족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지원, 생활지원 서비스 등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또한 ‘가족’단위의 지원보다는 노인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지원이 많아 조부모-손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표 Ⅳ-18〉 조손가족관련 지원정책 요약

	정책/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
경제적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지원됨.
	디딤씨앗통장	-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만18세 미만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 시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지원 (월3만원 내)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저소득 한부모가구 대상으로 아동양육비(12세 미만, 월 5만원)·교육비 지원(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 조손가족 등이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비용 지원
	대리양육	-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정책/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
	가정위탁	- 아동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생계·의료·교육급여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지원
	기초노령연금제도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2011년 현재 가구형태에 따라 20,000~144,000원/월 이 지급됨
양육 및 생활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조손가족은 우선순위 지원대상이며, 양육돌보미, 학습돌보미, 기관파견돌보미, 법정전염병 간염 아동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됨
	의료서비스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비 전액 지원(차상위는 일부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조손가족의 직계비속 연령이 모두 21세 미만일 경우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변·활동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
복지 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2011년부터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조손가족통합 프로그램(아동 학습지원, 생활가사돌봄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이 시범운영 됨
	드림스타트	- 0세~만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통합교육 및 복지활동 지원(예: 생활지원,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노인복지 서비스	- 노인을 대상으로 정서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 가족단위서비스(예: 가족교육, 가족역할훈련, 상담서비스 등)를 제공

- 따라서, 조손가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아동, 노인정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첫째,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손가구를 위한 연금수급권 특례조항 마련,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범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 및 지원액의 현실화 등 조손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필요함(민기채, 2011).
  - 둘째, 조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및 손자녀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예: 일상생활 지원사업, 급식서비스 등) 확대, 양육관

련 기술교육 실시 및 영유아돌보미사업, 학습활동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함.

- 셋째, 조손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넷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 조손세대통합 프로그램, 자조집단 활성화 등 정서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조손가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다섯째, 조손가족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예: 조손가족에 대한 개념정의, 정책지원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등).
- 여섯째, 조손가족에게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이용절차를 제공 하여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구체적인 법 개정이나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조손가족지원의 근거와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조손가족지원법 제정안과 같은 두 가지 정책방안을 제언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하여 개정할 경우 양육비지원액 현실화(한 부모가족 추가생계비 지급 및 조손가족 추가수당 지급), 조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조손가족 통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음.
  - 조손가족지원법을 따로 제정할 경우 이정선 의원안 등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 기존 제도들과의 중복 및 충돌지점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뿐만 아니라 법안의 구체성에 비하여 조손가족의 소득수준 등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Burnette, D.(1999a),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latino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9: 305-318.
- \_\_\_\_\_.(1999b), "Social relationships of Latino grandparent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9: 49-58.
- Elkind, D.(1990), "Grandparenting: Understanding today's children", Rosement, NJ: Nodern Learning.
- Jones, M. R.(1993),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of their grandparents" Paper presented at the 101st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Jendrek, M. P.(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Jendrek, M. P.(1993),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Effects on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609-621.
- Kornhaber, A.(1995), "Grandparents power: How to strengthen the vital connection among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New York: Crown.
- O'Reilly, E. & Morrison, M. L.(1993), "Grandparent-headed families:New therapeutic challenge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3:147-160.
- Solomon J. C., & Marx J.(1995), "To grandmother's house we go: Health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raised solely by grandparents", *The Gerontologist* 35(3): 386-394.
- 강기정(2008), "조손가족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정책 방향", 『한국가족복지학』 13(3):111-128.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 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 권인수(2002),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권 2호:21-223.
- 김미혜 · 김혜선(2004a),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노년학』 24권 3호.
- 김미혜 · 김혜선(2004b), "조손가족 손자녀의 정서 ·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관련 요인연구" 한국노년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승권 외(2010), 「최근 가족해체의 실태와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 김태성(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김혜선(2005), “농촌과 도시지역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85-117.
- 김혜선(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85-116.
- 김혜영 외(2006), 「이혼 후 자녀양육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남명숙(2000), “손자녀양육 조부모의 생활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기채(2011), “조손가족 이전소득의 빈곤감소 효과: 조손가족, 독거노인가구, 노인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비교”, 『한국노년학』 31(2):321-341.
-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경미(1988), “조부모 역할에 관한 기초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화순 외(2000), 「최근 가족해체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 서홍란 · 김양호(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267-296.
- 성지혜(2001), “빈곤한 조부모손자녀세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관한 연구-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병돈(1999), “사적 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 39:157-179.
- 신은정(2004), “조부모손자녀세대의 가족기능과 손자녀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동훈 · 김혜영 · 안치민(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옥경희(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103-114.
- 이미영(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203-228.
- 이화영(200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 이정화 · 한경혜(2008), “농촌 조손가족의 세대관계와 손자녀 양육 조모의 심리적 복지”, 『한국노년학』 28(1):177-196.

- 이화영(2007), “조손가정 조부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사정도구의 개발”, 『노인복지연구』 38(겨울호):359-382.
- 정일선(2004), “농촌 조손가정의 형성과 여성노인의 적응”, 경북대 박사학위청구 논문.
- 최해경(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115-142.
- 최혜지(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3):641-655.
- 최혜지(2003), “미국 손자·녀 전담양육조모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207-222.
- 한경희(1988), “유아기 자녀양육에서 할머니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11), 『2011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1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2010),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11), 『2011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부 록





## &lt;부 록&gt;

# 조손가족지원법안 (이정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15
----------	-------

발의연월일 : 2011. 2. 14.

발 의 자 : 이정선 · 김소남 · 김정권 · 김태원 ·  
김호연 · 노철래 · 이한성 · 손숙미 ·  
유기준 · 임해규 의원(10인)

## 제안이유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의 이탈로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은 매년 5%씩 증가하여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7만 가구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조손가족의 월 평균소득은 60만원 수준으로 41%의 조부모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가정위탁부모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조손가족 비율은 약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서류상으로 아동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조손가족은 고령화의 문제와 아동양육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자활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같이 자활능력을 유도하고 수혜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손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고 정부의 자발적인 조사와 선정에 의하여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갖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조손가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조손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조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조손가족을 계층별로 구분하고, 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손가족수당, 조손가족 아동학습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7조).
-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에게 의료비 등의 복지자금 대여, 세제 감면, 고용의 촉진 및 연계,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을 원칙으로 1층부터 2층까지의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되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하고, 3층은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뒤에 선정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복지단체에 조손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급여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분담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 조손가족지원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조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부모”란 아동의 조부모, 조모 또는 조부나 외조부모, 외조모 또는 외조부를 말한다.
2. “조손가족”이란 부모의 사망, 생사불명, 장기복역, 병역 복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말하며,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계층으로 구분한다.
  - 가. 1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계층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 나. 2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고 100분의 150 이하인 계층에 해당하는 조손가족
  - 다. 3층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손가족

3.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4. “조손가족수당”이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대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5. “조손가족아동학습수당”이란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단위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조손가족복지단체”란 조손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배치·활용)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손가족의 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조손가족복지단체의 육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복지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제2장 복지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7조(복지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의 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다음 각 호의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조손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조손가족수당
2. 조손가족 아동학습수당
3.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아동교육지원비
6.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7. 취업장려금
8. 건강보험료
9. 공공요금(건강보험료나 공공요금의 경우 급여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복지자금의 대여)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아동의 대학 입학금 및 첫 학기 학자금 등의 아동교육비
2. 의료비
3. 주택자금 및 주거환경개선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자금의 한도, 대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세제 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조손가족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고용의 촉진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조손가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조손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각종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이후 사업주가 조손가족을 고용할 경우에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손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의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 취업알선, 우선 고용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우선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조손가족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이나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학습지원 서비스
- 2. 아동 및 조부모 건강 및 의료지원 서비스
- 3.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돌봄 서비스
- 4. 아이돌봄 및 노인돌봄 서비스
- 5. 조손가족 문화체험 활동 지원
- 6. 교육·상담 및 친부모와의 교류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손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제3장 복지급여의 실시

제13조(급여의 신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을 원칙으로 1층부터 2층까지의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되, 조손가족,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하며, 3층은 조손가족,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에 보호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 시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과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질문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급여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한 자, 보호대상자, 고용주(이하 이 항에서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등의 주거,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조손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복지급여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보호대상자가 제11조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보호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이 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과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대상자 관리 및 복지급여 업무의 전자화)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3조와 제14조 및 제15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호 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대상자의 조사·보고)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의 보호대상자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급여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급여 신청인에 대한 제2항의 통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

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조사·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9조(복지급여의 정지·중지) 여성가족부장관은 조손가족으로서 복지급여를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1. 가족구성원 또는 소득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했을 때
2. 아동이 보호대상 연령을 초과했을 때
3.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할 때
4. 그 밖에 복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제20조(이의신청)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제18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선정(거부를 포함한다)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호기관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③ 보호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장 비용

제21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손가족복지단체에 조손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급여의 지출액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제23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손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 시 불응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5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조손가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2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는 이 법에 따른 조손가족으로 본다.
- ③ (다른 법률의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 조손가족지원법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은 조손가족을 “부모의 사망, 생사불명, 장기복역, 병역 복무,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로부터 유기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생활실태에 따라 3계층으로 구분하여(안 제2조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손가족에 대해 복지급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제8조, 제12조).

복지급여 내용은 계층별 차등지원이 가능한 조손가족수당, 아동학습수당,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취업장려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과(안 제7조), 아동의 대학입학금 등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대여(안 제8조), 가사돌봄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안 제12조)로 요약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1) 계층별 복지급여 내용

제정안 부칙 제2항 및 제3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를 제정안에 따른 조손가족으로 간주하고, 조손가족에 관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규정을 폐지하고 있다. 한편, 안 제7조에 따르면 조손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그대로 계승하여 수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복지급여 내용이 확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조손가족에 대하여는 제정안의 복지급여 중 생계비, 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건강보험료, 공공요금, 주거환경개선비용, 의료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제정안에 따라 계층별 지원급여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과 기초생활급여는 현행과 같이 1층(기초생활급여는 1층 중 최저생계비 이하 자)에만 지원될 것을 가정하였으며, 조손가족수당은 모든 계층에 정액(월 5만원)지급되며, 아동학습수당 및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 조손가족을 제외한 1~2계층에 대해 차등지급(1층 각 10만원, 2층 각 5만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택자금 등 대여금 과 조손가족의 개념상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취업장려금 등 급여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제정안에 따라 신규로 지급되는 급여내용을 조손가족수당, 조손가족아동학습수당, 생계비로 가정하였다.

〈부표 1〉 계층별 복지급여 지급(가정)

해당 조항	급여종류	1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	2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3층
안 제7조 (복지급여의 내용)	조손가족수당	5만원	5만원	5만원
	아동학습수당	10만원	5만원	
	생계비	10만원	5만원	
	아동양육비	기초생활보장사업 한부모사업	-	-
	아동교육지원비	기초생활보장사업 한부모사업	-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추계대상 제외 (기초생활보장사업)	-	-
	취업장려금	“	-	-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 및 보험료 경감)	-	-

해당 조항	급여종류	1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	2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	3층
안 제8조 (복지자금의 대여)	아동의 대학 입학금 및 첫 학기 학자금 등 교육비	추계대상 제외	-	-
	의료비	“	-	-
	주택자금 및 주거환경개선 자금	“(한부모사업, 영세민 전세자금사업)	-	-
안 제10조 (고용의 촉진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추계대상 제외	-	-
안 제12조 (가족지원 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사업	-	-

주: 음영 처리된 부분이 제정안에 따라 신규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를 가정한 내용임.

## (2) 추계대상

제정안의 계층별 정의에 따르면, 조손가족 1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기준에 있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과 동일하다. 그러나 가족구성 요건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과 다를 수 있다. 현재 만 18세를 초과하는 손자녀도 함께 있다면 한부모가족이 될 수 없으나, 제정안 시행시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제정안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족 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조손가족 수 보다 크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규모는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에 해당하는 1층 조손가족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조손가족 수와 같다고 가정한다.

## (3) 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서 추계기간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년으로 하되, 2012년 7월 이후 시행될 것을 가정한다.



###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조손가족을 1~3계층으로 구분하여 조손가족수당(1~3층, 5만원), 아동학습수당(아동 1명당, 1층 10만원, 2층 5만원), 생계비(1층 10만원, 2층 5만원)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2012년 59억원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 5년간 총 5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계층별로 보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1층은 2012~2016년까지 5년간 529억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2층은 44억원,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3층은 4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부표 2〉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12~2016년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1층 조손가족	54.5	112.6	116.5	120.5	124.9	529.0
2층 조손가족	4.5	9.3	9.7	10.0	10.4	43.9
3층 조손가족	0.4	0.9	0.9	1.0	1.0	4.2
계	59.4	122.8	127.1	131.5	136.2	577.1

### 4. 부대의견

없음.

###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팀

팀 장 임 재 봉

예산분석관 김 애 선

(788-4645, bce2@nabo.go.kr)

## Abstract

# Research on the Life-World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and policy Implications

Hye-Young Kim  
Eun-Ji Kim  
In-Hee Choi  
Young-ran Kim

Given the increase in family diversity through changes in family value and family structure, the number of grandparents who are the primary caretakers of their grandchildren (hereafter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Yet, few research on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 have utilized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families and their needs. Likewise, systematic support systems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have been sparsely develop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life world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by investigating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nd compares such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more traditional families where both parents raise their children and those where single parents raise their children, using national level data.

According to the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data, the characteristic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are as follows: there are about 65,000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hich comprises about 0.4% of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and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per household is less than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raised by both parents households and single parent households. The mean age of children raised by grandparents tended to be older than that of children raised by both parents. Approximately 57.9% of grandparents who raised their grandchildren lived together with their spouses. In terms of grandparent's age, about 53.7% of grandparents who raised their grandchildren were in their 60s, and 38.6% of them were in their 70s, and about 4.6% of them were in their 80s. About 1 out of 3 grandparents had disabilities and about 1 out of 5 grandparents had limitations with daily activities, and about 29% of grandparents responded that they had at least one or more physical/mental disability.

About 26.5% of grandparents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ere in the labor force, and the majority of them wer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ith regard to income, the major source of income among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as personal transfer, and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mong them was lower than that of single parent households. In regard to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y beneficiaries, we have

estimated the number of potential recipients: the number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ho are under the 100% of national minimum standards are 64.9%, and those who are under the 100-130% of national minimum standards are 18.6%, and those who are above 130% of national minimum standards are 16.5%.

The caring of preschoolers is predominantly conducted by grandparents, and grandparents are the major care providers for the afterschool care of grandchildren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showing a stark contrast to other types of families who utiliz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private lessons for afterschool care. In addition, many grandparents expressed their concerns and difficulties as a major caregiver, especially in the areas of guidance and tutoring in their grandchildren's education, developing communication skills with their grandchildren, and building a sound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m.

With regard to academic achievement, children from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have lower educational attainment in terms of being less likely to obtain an advanced degree. In addition, the 2010 National Survey of Youth Risk Behaviors data produced by th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hows that adolescents from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were likely to show more aggressiveness, compulsiveness, and carelessness compared to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households. Likewise, adolescents from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have friends with anti-social characteristics, and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noxious environments such as harmful online content and internet

addiction as compared to other adolescents.

As shown,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have lower levels of income and poor health, as well as being more likely to be open to negative environmental factors that hinder educational development. Thus, developing 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policy instruments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is imperative. Yet, currently we do not have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that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meet their needs. Although both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re able to receive support from aging, child care, and low-income family care policies, such support is neither integrative nor comprehensive. In particular, most policies are designed to support families with low incomes; the majority of policy instruments are geared toward economic support with limited child care support, health care support, and assistance with house chore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ort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the following policy instruments are required to comprehensively address their specific needs: (1) strengthening the income support policy for them, (2) increasing the hands-on care system for them (e.g., help with household chores, delivery of meals) and the opportunity of learning childcare skills(e.g., educational programs) that may decrease the caregiving burden of grandparents and advance grand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s, (3) bolstering the public health support system to improve well-being of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4) increasing emotional support programs that are designed to improve family relations and intergenerational cohesion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as well as supporting self-support groups, (5) providing information on available

services and assisting grandparents in gaining access to such services, and (6) strengthening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m. Particularly, amendments of law and/or bills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rationalization of childcare expenses, increase in the amount of health care fe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erb institutions to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for grandparent(s)-grandchild(ren) households.

2011 연구보고서(수시과제)-1

### **조손가족지원방안연구**

---

2011년 4월 29일 인쇄

2011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태 현**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403-2 93330

<정가 9,000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



ISBN 978-89-8491-403-2